

---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평가와 개혁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

장 익 현(연구책임자)

2025. 11. 30.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평가와 개혁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2025. 11.

연구책임자: 장익현 (한신대학교)

참여연구원: 권향원 (아주대학교)

도민지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 한신대학교 유라시아 연구소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의견이며,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제 출 문

국회 입법조사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 지원사업 평가와 개혁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1월

장 익 현



## 요 약

- (주요목적) 본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현재 연구지원체제와 연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인문사회분야의 연구 진흥을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제안함
- (배경) 2009년 학술진흥재단과 과학기술재단이 합병되면서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함. 연구지원체제의 통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와 서너지, 그리고 융합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의 연구지원체제가 통합됨
- (경과) 학문의 성격이 다른 두 분야의 연구지원체제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우려의 의견들이 많았음. 특히 인문사회계의 경우 예산과 사업의 규모가 큰 과학기술계에 비해 소규모의 장기 연구들 중심이므로, 기능이 통합되었을 때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지원체제가 확립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15년 이상이 지난 현재 연구사업비로 볼 때 인문사회계는 과학기술계에 비해 5%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규모로 볼 때 압도적으로 과학기술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의 연구기능을 분리 하자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의 연구지원체제에 대한 비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그리고 조직 통합과 분리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문사회 분야 연구 진흥을

위한 한국연구재단의 개편 방안을 장·단기로 나누어서 제시함

□ (연구지원체계 및 연구사업 평가)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원체계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평가체계 및 여러 지표가 과학기술 분야 중심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의 기획-집행-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인문 사회 분야는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기능 중복의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인문 사회계의 경우 기획-집행-평가가 단절적으로 운영됨
- 사업예산의 측면에서 볼 때도 인문 사회의 연구비는 과학기술 연구 사업의 5~6% 수준에 불과함

○ 또한 평가체계 역시 인문 사회계에 불리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인문 사회 분야는 연구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논문의 수가 적으나, 과학기술 중심의 양적 평가 지표가 함께 적용되어 불리한 측면이 있음
- 연구의 양적 성장과 해외 네트워크 확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근본적인 한계가 지속됨

○ 전문가 인터뷰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음

- 두 분야의 학문적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문 사회 분야 지원이 예산의 측면에서 매우 빈약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

○ 연구지원기능의 분리 및 통합의 논의는 지속해서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연구재단 출범 이후 15년이 흐르며 예산과 인력의 규모가 증가

했음. 현실적으로 급격한 구조의 개편은 어려우며, 단기-중/장기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연구지원체계 개선 방안)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들지 않고 법률의 변화가 필요 없는 교육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함.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법률에 기반하여 인문 사회 분야의 연구지원체계를 분리함.

- 단기개편안은 교육부의 학술연구정책과를 국 단위의 학술연구정책관으로 승격시킴
  - 이를 통해서 정부 조직 차원에서의 기초학술 진흥 의제를 강화하고 인문 사회 분야의 연구기획기능을 강화함
  - 법률의 변화 없이, 또한 조직 인원과 기구의 순증 없이 기존의 인력과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장기 개편 방안은 한국 학술진흥원(가칭), 인문사회과학기획평가원(가칭)을 새로 설립하고 학문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융합탐색위원회를 설치함
  - 한국학술진흥원은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인문사회과학기획평가원은 연구의 성과를 관리하여 기획-집행-성과 관리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방안을 제시함. 한국학술진흥원은 과거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참고로 하고, 인문사회과학기획평가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준하여 조직을 구성함
  - 융합탐색위원회는 총리 직속으로 구성하고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 부위원장을 하며 과학기술계와 인문 사회계가 균형있게 참여하여 인문사회과학의 정책기획역량과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차 례

## I.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가. 연구의 배경 .....	1
나.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 II 연구지원체계·연구사업 연혁 및 현황 분석 / 7

1. 연구지원체계의 변화 과정 .....	7
가. 학술진흥재단 시대 (1981 - 2009) .....	7
(1) 초기 발전 과정 .....	7
(2) 통합의 논의 전개 .....	12
나. 한국연구재단 출범 이후 (2009년 이후) .....	15
(1) 통합의 과정과 특징 .....	15
(2) 통합 초기의 주요 이슈와 대응 .....	17
(3) 한국연구재단 출범의 의의와 한계 .....	19
2. 연구지원체계 현황: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	21
3. 주요 연구지원사업 현황 .....	26
가. BK21 사업 (1981 - 2009) .....	26
나. 인문한국 (HK/HK+) 사업 .....	33
다. SSK 사업(2010 - 현재) .....	38
라 리이즈·글로컬 사업 .....	43
(1) 개요 .....	43
(2) 리이즈 사업 특성과 주요 이슈 .....	43
(3) 글로컬 대학사업의 특성과 주요 이슈 .....	55

### Ⅲ. 연구지원체계 및 연구사업성과 평가: 문헌연구 / 63

1. 개요 .....	63
2. 연구지원체계 평가: 인문사회연구지원과 과학기술분야지원 간 비교 중 심으로 .....	64
가. 예산 비교 .....	64
나. 지원행정체계 비교 .....	66
3. 문헌 연구를 통한 연구사업 평가 .....	69
가. BK21사업의 성과 .....	69
나. HK 사업 성과 .....	73
다. SSK 사업의 성과 .....	77

### Ⅳ. 연구지원체계 및 연구사업성과 평가: 전문가 조사 / 79

1. 전문가인터뷰 개요 .....	79
2. 조사 결과 분석 .....	81
가. 연구지원 사업의 성과 및 기여 .....	81
나. 연구지원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	83
한국연구재단 중심의 연구지원 거버넌스의 장점과 문제점 .....	84
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담기구의 설치 또는 지원기능 분리에 대 한 의견 .....	87
마. 기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	90
3. 소결 .....	93
4. 연구지원체계 통합과 분리의 논리 .....	95
가. 통합과 분리에 대한 기본 논의 .....	95
나. 한국연구재단 분리 근거 검토 .....	96
다. 연구지원체계 개편 모형 분석 .....	97

라. 연구재단 분리 장애 요인 검토 .....	100
---------------------------	-----

## V. 인문사회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03

1. 제도개선 방안 요약 .....	103
2.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	104
가. 문제제기: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위기 .....	104
(1) 당면한 위협과 오래된 실패 .....	104
(2) 대안의 상황 .....	107
나. 개선방안 .....	115
(1) 거버넌스의 현황 .....	115
(2) 제도적 개선방안 .....	122
3.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	130
가.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 개편 .....	130
(1) 연구지원사업 개편 .....	130
(2)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 촉진 .....	131
나. 지원체계 개선 방안 .....	133
(1)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성 .....	133
(2) 한국연구재단의 분리와 한국학술진흥원의 설치 .....	136
(3) 융합탐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40
(4) 기획 및 평가 전담기구 .....	147
4. 법령 제·개정안 .....	152
가. 한국학술진흥원 설립을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안 .....	152
나. 「인문사회과학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간 융합 촉진법」(가칭) 제 정안 .....	158
다. 인문사회과학분야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안 .....	163

VI. 결론 / 166

- 1. 연구의 요약 ..... 166
-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 168

□ 참고문헌 / 170

## 표 차례

[표 1] 분야별 예산 배분 현황 .....	24
[표 2] BK21 단계별 사업구조 및 예산 규모 .....	27
[표 3] BK21 사업 단계별 지원 현황 .....	29
[표 4] BK21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32
[표 5] HK 사업 단계별 지원 규모 및 참여연구소 수 .....	37
[표 6] HK 사업 종료 후 연구소 운영 현황 .....	38
[표 7] SSK 사업 모형 .....	40
[표 8] SSK 사업내용 .....	41
[표 9] RISE 사업 성과관리 방안 .....	51
[표 10] 지역라이즈센터 예산 및 사업비 .....	54
[표 11] 글로컬 대학 비전 .....	59
[표 12] 2024 글로컬 대학 본지정 대학 핵심 키워드 .....	51
[표 13] 교육부 학술진흥과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기능상 유사 중복 여부 검토 .....	68
[표 14] 학문 분야별 참여 현황 .....	72
[표 15] HK 사업 성과지표 (요약) .....	74
[표 16]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	91
[표 17] 연구재단 개편 논의 종합 .....	99
[표 18] 제도 개선 방안 요약 .....	103
[표 19] 교수 명칭의 다양성 .....	105
[표 20] BK21 4단계 사업 중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지역분포 현황 .....	109
[표 21] 원 체제와 현 체제 비교 .....	114
[표 22]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업무분장 .....	116

[표 23]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실 조직별 업무분장 .....	117
[표 24] 법리상의 비교 .....	124
[표 25] 교육부 학술연구지원과의 주요 업무 구성 방안 .....	126
[표 26] 인문사회과학기획평가원의 조직 구성 .....	150

## 그림 차례

[그림 1] 4단계 BK21 비전체계도 .....	30
[그림 2] HK, HK+ 추진 전략 .....	34
[그림 3] HK, HK+ 단계별 사업 내용 .....	35
[그림 4] 라이즈 사업 전략과 목표 .....	45
[그림 5] RISE 비전 및 목표 .....	49
[그림 6] 글로컬 사업 개념도 .....	56
[그림 7] 연구분야 분류에 따른 연구비 추이 .....	65
[그림 8] 구조결정론이 가정한 것과 실제현실의 차이 (개념도) .....	123
[그림 9] 교육부 인재정책실 개편방향 .....	129
[그림 10] 조직 개편안의 방향성 .....	135
[그림 11] 미국과 일본 사례 .....	137
[그림 12] 이강재(2019)·주상현(2021)의 학술진흥원 기본 설계안 .....	139
[그림 13] 가칭 융합탐색위원회의 구성 .....	140



## I.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의 배경

21세기 사회는 기술 혁신과 사회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적·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윤리적 문제와 정보격차, 사회적 갈등 등 새로운 사회적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초학문은 단순한 지식 생산을 넘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창의적·비판적 역량과 사회적 감수성을 육성하는 토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장덕호, 2025).

동시에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기후 위기 등 구조적 위기 요인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문사회과학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생태계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화되고 대학원 교육과 연구지원 체계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연구 예산과 지원 조직은 과학기술 분야와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연구비 집행과 R&D 관리 중심으로 기능이 집중되면서, 학술진흥과 기초학문 연구 생태계 조성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인문사회 연구지원 방식의 근본적 혁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존의 후발형 모델에서 벗어나 원천 기술과 지식, 정책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

는 선도형 모델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강성호, 2025). 이를 위해 대학의 교육·연구 지원 제도와 학술 지원 기관 간의 상호 협력 구조를 정비하고, 인문사회 분야 학술 생태계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 문제 해결과 국가적 혁신을 위해 인문사회과학의 전략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국가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연구를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나.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국가적·사회적 문제 해결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공공부문의 지원 체계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 차원의 인문사회과학 지원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연혁과 현행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주요 주체들이 인문사회 분야 발전에 실제로 이바지하는 정도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분야 주요 연구지원사업(BK21, HK, SSK 등)을 진단하고, 이들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재단 개편과 기능 분리 등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체계 개선 논의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기초학문 연구 생태계와 학술진흥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지역 과학기술원과 유사한 인문사회 연구 중심 대학 설립 논의, KISTEP과 유사한 인문사회 연구 전담기관 설립 방안, 해외 주요국의 성공적 학술·연구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연구재단 개혁과 국내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 및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적

지원 모델을 재구축하고, 인문사회과학이 미래 사회의 핵심적 문제 해결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첫째, 인문사회 연구지원 체계의 역사적·제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주요 연구지원 기관의 설립 배경, 역할, 핵심 사업을 검토하고, 교육부 및 관계 부처의 학술지원 체계가 어떠한 구조로 운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으로의 통합 과정에서 기관별 기능 변화, 조직 개편,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 간 예산 배분 변동을 추적하여 연구지원 정책의 역사적 흐름이 인문사회 학술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 체계와 연구사업을 평가하였다. 인문사회계의 연구지원체계와 과학기술계의 연구지원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연구재단 통합 및 분리 논의를 다룬 선행연구의 핵심 쟁점을 재정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통합·분리 논의가 제기된 배경, 논쟁의 중심 논리, 현실적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넷째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연구재단 및 인문사회연구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단기는 법령의 제·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며, 중/장기는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서 인문

사회계 연구지원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혁 분석(histor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기관의 설립 문서, 제도 변화 기록, 조직·사업 구조 관련 1차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지원기관과 정부 부처의 역할 변화와 제도적 흐름을 파악하였다.

둘째, 연구지원체계 및 연구사업 성과 분석을 위해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문헌 분석은 기존 한국연구재단 및 교육부의 공식 보고서, 성과 자료, 통계 문건을 분석하여 인문사회 연구지원사업의 운영 방식과 성과·한계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연구지원 체계 분석을 위해 정책 문서·내부 규정·평가 지표를 비교·분석하고, 실제 사업의 기획 - 집행 - 평가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문사회분야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요구를 수집하였다.

셋째, 선행연구 분석(literature review)을 통해 연구재단의 통합·분리 논의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학술논문, 정책연구, 평가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주요 주장, 분석 관점, 통합·분리 논의가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유 등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인문사회계 연구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문사회 연구지원체계 재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지원기관 설립과 조직 구성 방안, 각 하부 기구별 기능 정의 등을 포함한 구체적 설계를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 검토 측면에서는 연구지원사업의 효율성

과 거버넌스 재정립을 위해 한국연구재단법의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령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학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방안을 분석하고, 법령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정책적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현행 인문사회 연구지원 체계와 법·제도적 기반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정책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학술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연구지원체계 · 연구사업 연혁 및 현황 분석

### 1. 연구지원체계의 변화 과정

#### 가. 학술진흥재단 시대 (1981 - 2009)

##### (1) 초기 발전 과정

한국의 과학기술과 학술연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지원체계의 구축과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연구지원 전문기관의 설립과 발전은 한국의 학술연구 생태계 발전의 핵심 축을 형성하였다 (박귀순 외, 2017). 한국의 학술연구지원체계는 1960년대 경제개발 시기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심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 후반 한국과학재단의 설립을 통해 대학 기초연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198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설립으로 인문사회분야를 포괄하는 통합적 학술지원체계가 구축되었으며, 2004년에는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설립되어 국제협력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한국연구재단, 2009). 세 기관은 각각 독자적인 영역에서 한국의 연구개발과 학술연구 진흥에 기여하였으나, 2009년 6월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한국의 현대적 연구지원체계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연구는 주로 소수의 정부기관과 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체계적인 연구지원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는 경제개발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역량 강화

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이 설립되어 응용연구 중심의 연구개발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국가기록원, 2006). KIST는 미국의 기술지원과 연구인력 유치를 통해 한국 과학기술 연구의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의 시발점이 되었다. 1967년에는 과학기술처가 발족되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탄생하였다.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지원은 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학의 기초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후, 197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 1973년 제1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처, 1997). 그러나 당시 국내 대학들은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첨단 연구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기초과학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산업·지식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창의력 배양과 기초과학의 육성, 과학 연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탁월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연구 투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국가기록원, 2014). 1976년 과학기술처는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S)와 공동으로 과학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대학교수의 연구 수준 향상 지원, 교수의 질적 수준 제고, 과학기술자의 국내외 교류의 촉진, 외국과의 공동연구 사업 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과학재단의 설립이 시의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기록원, 2014).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76년 12월 한국과학재단법이 제정되었으며, 1977년 2월 시행령이 제정되어 한국과학재단 설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sup>1)</sup>

한국과학기술재단의 설립목적은 ‘과학기술 연구 능력의 배양과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국제교류를 증진시켜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여 하는 것’이었다. 초대 이사장에는 과학기술처 장관이었던 최형섭이 임명되었으며 정부는 첫 기금으로 3억 5천만원을 출연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의 설립 배경의 핵심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에 따른 고급 과학기술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 활동 강화와 교육 내용에 대한 질적 향상이 시급한 시점이었다. 이 역시 당시의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증가와 무관치 않다. 셋째로는 국내 연구기관들의 기초 연구활동 전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 연구지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과학재단은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을 모델로 설립되었으나,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기초연구 지원 뿐 아니라 연구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의 기능을 포괄하였다. 이는 당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과 대학의 연구환경을 고려한 것이었다 (강기천, 2020)

한국과학재단은 설립 초기 재단의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일반연구지원 사업과 신진연구지원 사업이었다. 일반연구지원 사업의 경우 1978년 첫해에 3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92개의 과제를 지원하였고(과학기술처, 1997), 신진연구지원 사업은 젊은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이공계 석박사가 과정에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인력양성사업을 시작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의 연구지원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 동료평가를 거쳐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상향식 (Bottom-up)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부 주도 하향식 연구개발 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

1)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073&sitePage>

육성을 존중하는 선진적 연구지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강기천, 2020). 설립 초기 한국과학재단은 조직과 인력, 재원의 확보 등 기반 조성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80년대 들어 정부의 기초과학 육성 의지가 강화되면서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다.

한편,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1979년 학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학술연구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81년 4월 6일 학술진흥법 제6조에 의거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KRF: Korea Research Foundation)이 설립되었다.<sup>2)</sup>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문교부 (후에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학술연구 활동과 한국학 진흥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설립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과학재단이 주로 이공계 분야를 지원함에 따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학술연구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한국학의 연구 진흥과 국제교육의 확대가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설립 초기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였으나, 점차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로도 지원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한국과학재단은 응용연구 중심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순수기초연구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분담되었다(정세환, 2010).

이후 1980년대는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였다. 1982년부터 정부의 특정연구 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특정연구 개발비의 10%를 한국과학재단에 배정하여 기초연구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재단의 연구지원 규모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지원사업이 확대되었다.

2)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828&pageFlag= &sitePage=>

1986년에는 한국과학재단의 목적지향형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정성훈, 2010). 목적기초연구는 응용연구와 기초연구의 중간 영역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되 기초적 탐구를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강기천, 2020).

이후 1989년에는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 진흥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기초과학 연구를 진흥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초 연구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 6조는 정부는 기초과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연구 사업을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10조에는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과학기술처 장관은 한국과학재단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이로써 한국과학재단은 기초연구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진전에 따라 학술연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졌다.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구개발비가 GDP 대비 2%를 상회하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이 시기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사업은 더욱 다변화되었다. 한국과학재단은 우수연구센터(SRC/ERC) 육성사업,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등 대형 연구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김성수, 1999). 1999년에는 두뇌한국(BK, Brain Korea) 21 사업이 시작되었다. BK21 사업은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sup>3)</sup>. 이는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규모 국

가사업으로, 한국 대학 연구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초반에는 과학기술 국제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다. 세계화 시대에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며,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4년 2월 6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for Science and Technology, KICOS)이 설립되었다 (한국대학신문, 2004)<sup>3)</sup>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소 유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양자 간 및 다자간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였다. 셋째,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교류를 촉진하였다. 넷째, 국제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 그러나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설립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아 한국연구재단 통합에 포함되었다. 이는 재단의 독자적 역할 확립보다는 기존 연구지원기관과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더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 (2) 통합의 논의 전개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능 중복과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두 기관은 각각 과학기술부와 교육부 산하에 있었으나, 지원 분야와 대상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공계 분야의 경우 한국과학재단은 목적기초연구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순수기초연구를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장재혁 외, 2017).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

3)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182&sitePage>

4)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957#>

부가 신설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08). 이는 교육과 과학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기초과학에서 응용연구, 인력양성까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과 함께 산하 연구지원기관의 통합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2008년 3월 언론은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통합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정부가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임을 알렸다(전자신문, 2008). 그러나 통합 논의는 과학계와 학술계의 우려와 반발에 직면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기술계는 한국과학재단이 30년 이상 쌓아온 이공계 연구지원의 전문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였다. 인문사회계는 통합 후 이공계 중심으로 운영되어 인문사회 분야가 소외될 것을 염려했다(사이언스타임즈, 2008<sup>5)</sup>). 2008년 4월 과학기술인연대(과실연)는 포럼을 개최하여 두 기관 통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덕환 교수(서강대)는 "통합의 명분으로 연구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장학지원을 효율화한다고 하지만, 아직 두 기관 자체가 완전한 연구지원체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경험도 일천한 상태에서 선부른 통합은 오히려 연구지원 기능과 인재양성 기능의 불균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사이언스타임즈,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 계획을 추진하였다. 통합의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통합적 연구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학제 간 융합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중복 투자와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여 연구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대형 연구사업과 국제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넷째, 통합된 조직을 통해 연구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5) <https://www.sciencetimes.co.kr/nscvrg/view/menu/255?searchCategory=226&nscvrgSn=58281>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연구재단법의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법 제정의 목적은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인력의 양성과 활용, 연구개발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등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법제처, 2008).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인력의 양성과 활용, 연구개발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제5조). 둘째, 한국연구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제7조). 셋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6조에 의한 기초연구사업 및 제10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초법」 제18조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및 「학술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제12조). 넷째,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프로그램 매니저, PM 제도)를 운영한다(법제처, 2008). 한국연구재단법은 2008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9년 3월 25일 법률 9518호로 공포되었다.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차례로 제정되어 한국연구재단 설립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한국연구재단법」 공포 직후인 2009년 3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설립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임직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립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연구재단의 조직 및 정원 설계이다. 기존 세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통합하되,

기능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과제였다. 둘째, 사업체계 재편이다. 각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들을 재분류하고 통합하여, 전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셋째, 인사 및 자산 통합이다. 세 기관의 직원 처우와 자산 승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넷째, 정관 및 제 규정 제정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운영을 위한 각종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설립위원회는 약 3개월의 집중적인 준비 작업을 거쳐 한국연구재단 출범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 기관의 통합에 따른 갈등과 조정이 불가피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설립위원회의 노력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 나. 한국연구재단 출범 이후 (2009년 이후)

### (1) 통합의 과정과 특징

2009년 6월 26일,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이 공식 출범하였다(한국연구재단, 2009). 출범 당시 한국연구재단의 조직은 이사장 아래 사무총장을 두고,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학술진흥본부, 경영관리본부, 국제협력센터, 기획조정실, 정책연구실 등으로 구성되었다(한국연구재단, 2009). 정원은 약 300명 규모였으며, 대전 청사와 서울청사(서초구 헌릉로)를 두었다. 초대 이사장 박찬모 박사는 취임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출범은 우리나라 학술진흥 및 연구개발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연구자들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사이언스타임즈, 20096).

한국연구재단은 기존 세 기관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시너지를 창

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직 구성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학문분야별 본부제를 채택한 점이다. 기초연구본부는 주로 이공계 분야의 개인 연구와 센터 육성사업 등을 담당하고, 인문사회연구본부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를 지원하며, 국책연구본부는 국가 정책목표와 연계된 대형 국책 연구사업을 관리하는 구조였다(한국연구재단, 2009). 출범 당시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구진흥사업으로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SRC/ERC),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으로 인문학진흥사업,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등이 있었다. 셋째,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BK21 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넷째,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박사후국내연수사업, 여성과학기술인육성사업 등이 있었다. 다섯째, 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으로 국제공동연구사업,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출범 첫해인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예산 규모는 약 2조 4,622억 원이었다(한국연구재단, 2019). 이는 세 기관의 예산을 합친 규모로, 당시 국가 R&D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한국연구재단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프로그램 매니저(Program Manager, PM) 제도였다. PM 제도는 연구사업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사업 기획에서 과제 선정, 관리, 평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다(한국연구재단, 2009). 이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 선진국 연구지원기관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연구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연구재단법」 제16조는 "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6) <https://www.sciencetimes.co.kr/nscvrg/view/menu/255?searchCategory=226&nscvrgSn=72876>

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PM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PM은 상근 PM과 비상근 PM으로 구분되며, 대학 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 등이 임명되었다(한국연구재단, 2012). PM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연구 현장의 수요와 필요를 반영한 사업 기획이 가능하다. 둘째, 동료평가 중심의 과제 선정에서 전문성이 강화된다. 셋째, 연구과제 관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 넷째, 연구자와의 소통이 강화되어 연구자 친화적 지원체계가 구축된다(한국연구재단, 2009). 그러나 PM 제도는 초기에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PM의 권한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행정 업무 부담이 과중하며, 단기 계약직으로 인한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PM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 (2) 통합 초기의 주요 이슈와 대응

한국연구재단 출범 초기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가진 세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부 산하에서 이공계 연구지원을 중심으로 30여 년간 활동해 온 기관으로, 기술 중심적이고 목적지향적인 문화가 강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교육부 산하에서 인문사회 및 전 학문 분야를 지원하며, 학술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하였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설립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제협력과 네트워킹을 중시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한국행정연구원, 2013). 이러한 차이는 통합 초기 다양한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사업 우선순위 설정, 예산 배분, 인사 배치, 업무 프로세스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간의 시각 차이는 조직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한국연구재단 경영진은 이러한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 간 이해를 증진하였다. 둘째, 통합 워크숍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확립하여 신뢰를 구축하였다. 넷째,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비전과 미션을 제시하여 조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다(한국연구재단, 2010). 통합에 대한 여러 우려는 학계에서도 제기되었다. 한국연구재단 출범에 대한 연구자 및 학계의 우려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문사회 분야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공계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예산이 배분되어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염려였다. 둘째, 기초연구보다 응용연구나 국책연구가 우선시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셋째, 대형화·센터화로 인해 개인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박귀순 외, 2017).

한국연구재단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인문사회연구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인문사회 분야 예산을 보장하였다. 둘째, 기초연구 예산 비중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개인연구자 지원사업(개인기초연구, 신진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넷째, 연구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한국연구재단, 2010).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출범 초기부터 연구윤리와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며,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출범 후 사업체계의 정비와 효율화를 위한 여러 작업들도 추진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출범 후 기존 세 기관이 운영하던 사업들을 재분류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며,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 사업을 기획하였다. 2010년 한국연구재단은 사업체계를 9개 대표 사업군으로 재편하였다. ① 기초연구진흥, ② 원천기술개발, ③ 원자력 진흥 및 안전, ④ 거대과학기술개발, ⑤ 대학교육역량강화, ⑥ 학술연구역량강화, ⑦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⑧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⑨ 과학기술국제협력기금사업 (배경재, 2010).

이러한 사업체계 재편은 효율성 제고와 함께 새로운 도전과제를 동반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이 익숙하던 사업명이 변경되거나 통폐합되는 것에 혼란을 겪었다. 또한 새로운 분류 체계에 따라 지원 자격이나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세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며,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 (3) 한국연구재단 출범의 의의와 한계

한국연구재단의 출범은 한국 연구지원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전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됨으로써, 학제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한국연구재단, 2019). 또한 PM 제도 도입을 통해 연구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되었다.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 기획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연구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원기관에서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한국연구재단, 2009).

아울러, 세 기관의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고 중복 투자가 감소하였다. 조직, 인력, 시설 등의 통합으로 관리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유사하

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통합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과제 중복 신청을 방지하고, 연구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한국연구재단, 2010). 또한 한국연구재단 출범으로 대형 연구사업과 국제협력 추진 역량 역시 강화되었다. 통합된 조직의 규모와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전략 분야의 대형 연구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양자 및 다자간 국제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었다(한국연구재단, 2019).

그러나 한국연구재단 출범과 통합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문화 통합의 어려움,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간 시각 차이, 연구자들의 우려와 불안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또한 통합 초기 업무 프로세스의 혼란과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통합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조직만 통합되었을 뿐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이 부족하고, 오히려 대형화로 인한 관료화와 경직성이 증가하였다는 지적이었다(박귀순 외, 2017). 또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고, 기초연구보다 국책 연구나 대형 사업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도 지속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러한 비판과 과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출범 10주년을 맞아 '비전 NRF 2030'을 선포하고, "학술·연구의 생태계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한국연구재단, 2019). 이는 단순한 연구비 지원기관을 넘어 연구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 2. 연구지원체계 현황: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8본부 3센터 19단 22실 50팀 2TF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25년 1월 정규직 기준으로 622명이다(한국연구재단, 2024a). 조직 구조는 이사장과 사무총장 아래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학술진흥본부, 경영관리본부 등 주요 본부가 배치되어 있다(한국연구재단, 2024c). 통합 이전 세 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비교적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일반 연구자 중심이었고, 한국과학재단은 탁월한 연구자에게 장기적으로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는 중견 연구자와 리더 연구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2). 결국 통합을 통해 한 연구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특징적인 조직 운영 방식으로 PM(Program Manager)제도가 있다. PM은 연구기획에서 과제 선정, 평가, 진도관리, 성과관리 등 연구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연구사업관리 전문가로, 기초연구본부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에 PM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24c).

한국연구재단의 주요기능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한국연구재단, 2024a). 첫째,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이다. 기초연구, 국책연구, 대학재정 지원 등 전 학문분야에 걸친 연구 활동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한다. 둘째,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 지원이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BK21사업, 박사후연구원 지원 등을 통해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한다. 셋째,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이다.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 연구의 국제화를 도모한다. 넷째, 학술 및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 개발 지원이다.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 운영(한국연구재단, 2024d), 연구윤리정보포털 운영(한국연구재단, 2024e)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및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 협력 지원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독특한 조직적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다학문 통합 조직의 특성이 다. 이공계 중심의 한국과학재단과 인문사회 및 이공을 포괄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그리고 국제협력을 담당하던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되면서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조직이 되었다. 이는 학문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지만(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2), 동시에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신희영, 2014; 한국연구재단, 2024b). 둘째, 정부 예산 집행기관으로서의 특성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자체 수입보다는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2024년 기준 전체 예산 9조 9,324억원이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었다(한국연구재단, 2024a). 이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기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a; 정진호, 2025). 셋째, 평가와 관리 중심 조직의 특성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직접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한국연구재단, 2024f). 이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관리의 효율성이 조직 성과의 핵심 요소가 된다(한국연구재단, 2024e, 2024g). 넷째,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효율성의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한상일, 2010). 공공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학문의 다양성 보존과 연구자 자율성 보장이라는 공공적 가치도 추구해야 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예산의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연구재단의 예산은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2009년 출범 당시 2조 6,000억원 규모에서 (배무기, 2009), 2011년에는 2조 8,958억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2), 그리고 2024년에는 9조 9,324억원으로 약 3.8배 증가하였다(한국연구재단, 2024a). 이는 한국 정부의 R&D 투자 확대 기조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이 일관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2023-2024년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해 큰 변동을 겪었다.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전년 대비 9.5%(2조 7,794억원) 감소한 26조 5,369억원으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 이는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예산 감축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a). 이러한 예산 삭감은 계속 과제 연구비 10-20% 일괄 삭감으로 이어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a), 연구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2025년에는 정부 R&D 예산이 19.3% 증가한 35조 3천억원으로 반등하였으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a),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는 5-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정진호, 2025). 2024년 기준 한국연구재단의 예산은 총 9조 9,324억원이며, 분야별 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연구재단, 2024a)

[표 1] 분야별 예산 배분 현황

분야	금액	비중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2조 5,911억원	26.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	2,801억원	2.8%
국책연구 사업	2조 3,559억원	23.7%
연구진흥 및 인재양성 사업	4조 2,678억언	43%
국제협력연구사업	1,064억원	1.1%
`기타	3,302억원	3.3%

자료: 한국연구재단, 2024a

이 수지는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예산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보다 약 9.2배 많은 예산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흥 및 인재양성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를 살펴보면, 2023년 1만 4,499개에서 2024년 1만 3,080개, 2025년 1만 1,827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6년에는 1만 5,311개로 회복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a) 특히 2024년에는 기본 연구 사업이 폐지되면서 신입교수나 지역대학의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이 다소 저하되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b), 20205년에는 1,150억원 규모로 기본연구가 복원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b)

이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 예산은 전체 한국연구재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2024년 기준 2,81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하며(한국연구재단, 2024a), 이는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예산(2조

5,911억원)의 약 10.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2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총 3,007개 내외 과제에 662억 4,500만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5a, 2025b). 이는 과제당 평균 약 2,200만원 수준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이다. 2025년 한국연구재단 소관 인문사회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0.2%(37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한국연구재단, 2025). 이는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 예산이 14.6% 증가한 것(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a)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지원사업과 글로벌 아젠다 연구 예산이 일부 증가하였으나(한국연구재단, 2025), 전반적으로 인문사회분야는 예산 증가의 혜택을 충분히 못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주요 연구지원사업 현황

#### 가. BK21 사업 (1981 - 2009)

BK21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대학원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7년 단위로 단계별로 운영되며, 현재는 2020년에 시작된 4단계 BK21이 진행 중이다. 3단계 사업이 2020년 8월 종료된 이후, 4단계는 같은 해 9월부터 약 2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통해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20; 김명진·배관표, 2023).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BK21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연구개발 인력 양성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사업의 1단계(1999~2005)는 ‘대학원 혁신’과 ‘연구인력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단 단위로 전국 대학을 선정하였다.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월 40만~70만 원)을 지급하고, 참여교수에게 연구수당을 지원하였다. 이 시기의 총 지원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이며, 전국 70개 대학 300여 개 연구단이 선정되었다. 이공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었으나, 인문사회분야도 일부 참여하였다. 당시 인문사회분야는 총 연구단의 약 13%를 차지하였으며, 주로 교육학·경제학·사회학·철학 등 전통 학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평가 방식은 정량적 연구성과(논문 수, 피인용 지수, 학술대회 발표 실적 등) 중심이었다. 2단계(2006~2012)에서는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을 표방하며 대학원생의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 국제공동연구 참

여, 영어논문 작성능력, 산학협력 실적 등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은 대학 단위에서 학문 분야별 연구단으로 확대되었고, 학문영역별로 특화형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의 총 예산은 약 2조 3천억 원 규모였다.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참여율이 15% 내외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정책·경제·법학 중심의 응용연구가, 인문학분야에서는 언어·문학·역사 중심의 연구단이 선정되었다. 사업 운영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원지원팀이 담당하였으며, 성과 관리를 위한 중간평가와 연차 평가가 도입되었다.

[표 2] BK21 단계별 사업구조 및 예산규모

구 분	추진기간	주요 목표	참여 대학수	연구단 수	총 예산 (억원)	인문사회 비율(%)
1단계	1999-2005	연구중심대학 육성, 대학원 혁신	70	300	13,800	13.2
2단계	2006-2012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구축	88	353	23,200	14.6
3단계 (BK21 플러스)	2013-2020	융합·창의 인재 양성	119	500	27,000	15
4단계	2020-2027	미래형 연구인재 양성, 대학 혁신	121	611	28,700 (예정)	15.3

BK21 사업은 72개 대학의 438개 사업단에 7년간 약 1.3조원을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SCI 논문 순위를 18위에서 13위로 상승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었고, 고급 산업인력 집중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7년간 1.8조원이 투입되어 논문의 영향력 지수인 IF(Impact Factor)가 35%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13-2020년에 실시된 BK21플러스 사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에 2조원을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QS 대학 평가에서 200위권 이내에 12개 대학이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래의 [표 3]은 1단계와 2단계 BK21 사업과 BK21플러스 사업의 개요와 주요 성과이다 (교육부, 2020, 허정, 2021)

[표 3] BK21 사업 단계별 지원 현황

구분	1단계 BK21 (1999~2005)	2단계 BK21 (2006~2012)	BK21 플러스 (2013.9~2020.8)	
배경	5.31 교육개혁 이후 대학원 교육 개편 필요성 증대	고급 산업인력 집중육성 필요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석박 사급 창의인재 양성	
총 사업비	1조 3,409억원 (연간 약 2,000억원)	1조 7,566억원 (연간 약 2,500억원)	약 2조원 (2019년 2,724억원)	
지원 규모	72개 대학, 438개 사업단(1999)	74개 대학, 569개 사업단(2006)	73개 대학, 550개 사업단(2013)	
지원 인력	참여 대학 원생	연간 1만 2천여명	연간 2만여명	연간 3만여명
	참여 교수	3천여명	7천여명	7천여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I급 논문 등 정량 위주 평가를 통해 성과 중심 연구풍토 조성</li> <li>- 학부정원 감축 지표 도입 등 대학원 중심 체제로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의 IF 등 결과 지표 강화</li> <li>- 전임교원확보를 확대 및 학부정원 감축</li> <li>- 사업단 탈락과 신규 진입 등 경쟁체제 도입</li> <li>- 연구역량 높은 해외학자 유치 및 공동연구를 통한 교육·연구풍토 혁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 중심 성과관리체계 구축</li> <li>- 학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구조로 개선</li> </ul>	
주요 성과	우리나라 SCI 논문 순위: 9,444편 (1999, 세계 18위) ⇒ 18,497편 (2004, 세계 13위)	논문 1건당 IF 증가 ① 참여교수: 2.17(2006) →2.98(2011) 35.9%↑ ② 대학원생: 2.08(2006) →2.97(2011) 37.3%↑	QS 대학 랭킹 향상 ① QS 100위권 내 대학 5개 ② QS 200위권 내 대학 7개	

자료: 교육부, 2020; 허정, 2021

위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2020년 4단계 BK21 사업이 시작되었다. 4단계 사업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에 있다(교육부, 2020). 사업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이며, 연간 4,080억 원씩 총 2.9 조원이 투입된다. 4단계 사업의 유형은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성장 선도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4단계 교육연구단은 369개, 교육연구팀은 205개이다(교육부, 2023.1.25.). 사업비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경비, 교육연구단(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연구단(팀) 지원금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학원 본부 차원의 제도개혁 비용으로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구분되어 집행된다(교육부, 2020).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석사과정생 월 70만원, 박사과정생 월 130만 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경우는 월 100만 원 이상 지원된다.

[그림 1] 4단계 BK21 비전체계도



자료: 교육부 (2020)

교육부(2023.1.25.)는 2023년부터 지역대학원 지원을 확대하는 4단계 BK21 사업 수정계획을 발표하였다.<sup>7)</sup>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하여 대학원생 처우를 개선, 우수성과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을 부여하여 성과창출을 독려, 반도체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으로 반도체 인재양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석사과정생 월 100만원, 박사과정생 월 160만원, 박사과정 수료 이상이면 월 130만원으로 연구장학금이 확대되었다. 또한 상위 20% 교육연구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대학원생에게는 1년간 국외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수정된 사업 내용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7) 교육부(2023). 2023년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한다!. 교육부 보도자료.

[표 4] BK21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구분	미래인재 양성사업	혁신인재 양성사업
인력 양성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성장 선도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및 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할 융·복합형 연구인력 양성</li> </ul>
지원분야 및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문분야분류체계에 의한 지원</li> <li>- 과학기술(기초과학/응용과학/중점응용), 인문사회</li> <li>■ 전국/지역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 분야(AI, 드론,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및 산업·사회 문제 해결분야</li> <li>■ 전국/지역 구분</li> </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9개 교육연구단(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개 교육연구단</li> </ul>
참여대학원생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12,600여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6,400여명</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항목: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교육연구단 운영비(10%이내) 등</li> <li>- 석사 월100만원, 박사과정 월160만원, 박사수료 월130만원 이상</li> <li>■ 교육연구단(팀)이 운영지침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자율 집행</li> </ul>	

자료: 교육부, 2023.1.25.

BK21 사업 예산은 참여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과 국제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 연구자에게는 인건비와 연구비를 제공한다. 또한 참여 교수에게는 연구활동비, 학술대회 참가비, 성과급 등이 지급되어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BK21은 대학원 중심의 연

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김명진·배관표, 2023). 실제로 BK21사업은 대학원생, 신진 연구인력, 그리고 전임교수까지 모두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고급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생애주기별 지원이 하나의 사업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다(김명진·배관표, 2023).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 사업의 규모와 주목도에 비례하여 운영상 여러 제약이 존재하며, 초기부터 연구자들 사이에서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전체 참여 대학원생 중 약 70%만 연구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 방식, 중간평가를 통한 30% 탈락 제도, 그리고 복잡한 평가 기준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김명진 & 배관표,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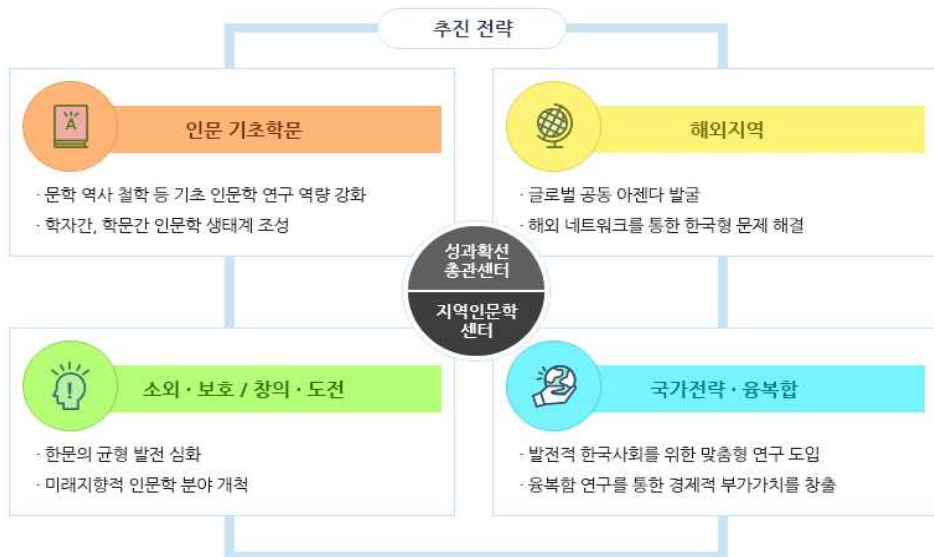
#### 나. 인문한국 (HK/HK+) 사업<sup>8)</sup>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의 인문사회 분야 연구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외국 학문을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학술연구조성비의 확대를 계기로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연구와 연구비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후 1999년 BK21사업과 2002년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인문학 분야의 장학금과 연구비가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2007년에는 대학연구소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인문한국(HK)지원사업이 도입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형태인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이 이어지며 인문학 연구의 지속성과 심화가 추진되었다.

8) 이 부분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 지원사업과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HK사업은 대학 인문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 체계를 정립하고자 전임 교수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은 장기적인 인문학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연구소의 기능 강화를 통해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확산 효과도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적 담론 형성과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HK+ 지원사업은 기존 인문한국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 연구소의 인문학적 성취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과 학문 간의 연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HK 사업과 HK + 사업의 추진 전략은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HK, HK+ 추진 전략



출처: [hk.nrf.re.kr](http://hk.nrf.re.kr)

HK 지원사업과 HK+ 지원사업은 우수한 대학연구소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인문기초학문 분야, 해외지역 분야, 국가전략 및 융복합 분야, 소외보호 및 창의도전 분야이다. 지원규모는 최대 7년이며 3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거쳐 4년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선정된 사업단에는 연간 최대 17억 원이 지원된다. 사업단은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3년간 초기 제도화, 이후 3년간 제도의 정착, 이어진 4년간 성과 확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HK, HK+ 단계별 사업 내용



출처: [hk.nrf.re.kr](http://hk.nrf.re.kr)

지역인문학센터는 대학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인문학적 성과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한다. 이 센터는 지역의 특성과 연구소의 전문 분야를 반영한 인문교육을 기획·운영하며,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민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희망의 인문학’, ‘평생 인문교육’과 같은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인문학 실천을 지향하며,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지역인문학센터 선정 연구소 대상 최대 2억 원이 지급되며, 초·중등, 대학,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및 활성화, 초·중등 인문소양교육 지원센터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동 등 단위 학교별 인문소양교육 지원 강화, 지자체·인문교육실시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 인문 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지원규모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연구소의 규모 및 인력 구성에 따라 연간 5억 원에서 10억 원 내외로 차등 배분된다. 연구소별로 기초연구, 학문 후속세대 육성, 국제학술교류, 지역인문자원 연계사업, 학술출판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도입 초기의 HK사업은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의 안정적 연구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의 단기 과제형 사업은 연구자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인문학의 체계적·집단적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소 단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차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46개 대학연구소가 선정되었으며, 각 연구소는 7년의 장기 연구 기간 동안 하나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문명 간 대화’, ‘지식의 전통과 변환’, ‘문화기호와 정체성’ 등과 같은 대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5] HK사업 단계별 지원규모 및 참여연구소 수

구분	추진기간	참여연구소 수	총 예산(억원)	주요 특징
1단계 (HK)	2007-2016	46	3,800	연구소 기반 조성, 기초연구 강화
2단계 (HK+)	2017-2024	42	4,200	국제화, 사회확산, 지역연계 강화
합계	2007-2024	88	8,000	—

HK사업의 지원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가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사업공모, 심사, 평가,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소는 사업계획서 승인 후 매년 연차별 연구성과를 제출하며, 중간평가(3년 차)와 종합평가(6년 차)를 거쳐 최종성과를 검증받는다. 성과는 논문, 저서, 학술지, 번역서,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협력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되며, 학문적 기여도와 사회적 파급력 모두를 정성·정량 복합평가로 측정한다.

HK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소 중심의 집단연구체제’라는 점이다. 이는 기존 개인연구사업과 달리, 연구소 단위로 연구자, 박사후연구원, 전임 연구교수, 행정인력까지 포함한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인문학 기초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문후속세대(박사후연구원, 신진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항목이 별도로 신설되었다. 이로써 HK사업은 인문학 인력의 안정적 연구기반을 제공한 최초의 제도적 모델로 평가된다.

사업의 2단계(HK+)는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소의 ‘국제화’와 ‘사회적 확산’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해외거점연구소 교류사업, 다국어 연구성과 출판지원이 강화되었다. 또한 HK+사업은 ‘인문도시사업’, ‘지역인문학센터’, ‘생활문화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연계형 활동을 병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인문학 연구성과의 사회 환류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였다.

2020년 기준 HK 및 HK+ 참여 연구소는 총 88개이며, 연구분야는 인문학 전통분야(철학, 사상, 역사, 문학)뿐 아니라 융합인문학(문화콘텐츠, 인공지능윤리, 디지털 인문학 등)으로 확대되었다. 아래 표는 HK사업 종료 후 연구소 운영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70% 이상은 사업 종료 후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인문학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6] HK사업 종료 후 연구소 운영 현황

구분	연구소 수	비율(%)	특징
지속운영	38	43.2	자체 재정확보, 대학예산 연계
부분운영	27	30.7	일부 프로그램 지속
종료	23	26.1	인력·재정 부족으로 중단
합계	88	100	—

#### 다. SSK 사업(2010-현재)

SSK 사업은 한국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을 통한 ‘우수 연구집단(Think Tank)’ 육성, 국가·사회 변화에 따른 연구수요 반영을 통해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과학 연구의

적실성 제고,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세계 주요 학자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선도적·실용적 연구 성과 창출 및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sup>9)</sup>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SSK사업은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적 적실성과 학문적 자율성을 갖춘 우수 연구집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과학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고장완 외, 2023).

SSK사업은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사회과학 연구집단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식의 생산과 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사회과학 분야의 차세대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장완 외, 2023; 교육부, 2014.4.11.).

SSK사업은 연구집단의 성장을 위해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강조하는 전략적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고장완 외, 2023). 이 사업은 소형연구팀(3년), 중형연구단(3년), 대형연구센터(4년)로 이어지는 3단계의 성장 경로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평가를 통해 연구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성장모형은 궁극적으로 국내 연구집단이 세계적 수준의 사회과학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 2021).

9)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https://www.nrf.re.kr/page/378?menuNo=378&bizNo=237>

[표 7] SSK사업 모형

성장모형	경쟁모형	협력모형
소형연구팀(3년), 중형연구단(3년), 대형연구센터(4년)의 순으로 이어지는 총 3단계의 연차 및 단계평가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성장하도록 설계된 단계적 성장모형	하향(top-down)과 상향(bottom-up) 방식을 결합시켜 연구 아젠다를 발굴하고, 연구집단 간 경쟁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배가하도록 설계된 모형	학과나 대학 중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연구집단 간 자발전 연구 교류와 융합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는 공진화 모형

자료: 고장완 외, 2023: 7

2025년 현재 사업내용은 우수 연구집단 육성사업에 3가지 유형(단계지속형, 단계발전형, 연구집단지원), 글로벌 아젠다 연구 사업에 2가지 유형(국내, 국외)으로 나뉘며, 사회과학-인문 융합 분야를 포함한 사회과학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사회과학분야 연구자 및 단체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기관, 연구비 내용은 [표 8]과 같다.<sup>10)</sup>

10)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소개 페이지를 참고  
<https://www.nrf.re.kr/page/378?menuNo=378&bizNo=237>

[표 8] SSK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신규 과제수	지원 기간	연간 연구비
우수 연구 집단 육성	단계지속형 (소형+소형+소형)	사회 과학 전분야 (사회 과학·인문 융합 분야 포함)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10년 (2+3+4)	소형:100백만원 이/연 (간접비 별도)
	-			중형: 23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단계발전형 (소형+소형+중형)		사회 과학 분야 연구자 및 단체	-	3년	30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연구 집단 지원 (SSK-Networking 및 성과홍보사업단)	-					
글로벌 아젠다 연구	국내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4	3년	123백만원/연 (간접비 별도)
	국외			3		250백만원/연 (간접비 별도)

출처: <http://nrf.re.kr>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해당하는 교원)에 한정되며, 일반공동연구원은 인문학, 예술학, 복합학, 이공분야 등 전공분야의 제한이 없다.<sup>11)</sup> 공통적인 신청자격으로는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의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이공분야 5편) 이상이고,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이다.

SSK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시 평가방향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장완 외, 2023). 첫째,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을 평가한다. 단계지속형과 단계발전형의 경우, 연구주제가 Agenda와 부합하고, 사회과학 분야 연구 필요성과 적실성 제고가 가능해야 한다. 장기 데이터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주제 명확성, 다른 연구에의 기여가능성을 평가한다. 둘째, 연구팀의 비전과 목표, 사업 및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 연구성과의 기여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셋째, 연구인력의 역량과 운용계획 등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2010-2021년 SSK 사업에 참여한 연구집단은 총 273개 연구단(팀)이다. 이들 연구단(팀)에는 총 2,863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예산 지원을 통해 장기적 연구수행으로 학문 발전에 기여, 사회문제 해결 가능한 연구아젠다 설정, 사회과학연구의 활성화 공헌, 집단연구의 추진과 다학문적 접근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장완 외, 2023: 30-31). 같은 기간의 정량적 성과는 1,917편의 SSCI급 논문을 포함하여 10,843건의 학술연구 결과 발표, 15,332건의 성과확산 및 정책 연계, 29,440회의 네트워킹, 386명의 박사 배출 등 학문후속세대 양성되었다(고장완 외, 2023: 31).

11)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소개 페이지를 참고  
<https://www.nrf.re.kr/page/378?menuNo=378&bizNo=237>

## 라 라이즈 · 글로컬 사업

### (1) 개요

RISE는 “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Education”의 약칭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체계이다. 시범지역은 2023년부터 운영되었으며, 2025년까지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한다.<sup>12)</sup> 글로컬 (Glocal) 사업은 지역 특화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지역인재 육성, 지역대학의 자립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사업은 2023년 이후 고등교육·지역혁신 정책의 전환을 상징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서,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규제 권한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이양·분권하여, 대학을 지역혁신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위치시키는 분권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까지 각 시도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RISE 체계가 시행되고 있다. 글로컬대학30은 이 RISE 생태계 내에서 5년간 최대 1,000억 원의 대규모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트랙으로 운영된다. 2024년 본지정 10개 모델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예비지정(5월)과 본지정(9월) 절차가 진행되었다.

### (2) 라이즈 사업 특성과 주요 이슈

RISE는 “대학-지자체-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분권형 대학재정지원 모델이다. 교육부의 정의에 따르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교육부 2023.4). 정부는 급속히 변화하는 인구 및 산업 구조 속에서

12)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37/view.do?nttId=14321&menuNo=300192&pageIndex=1>

비수도권 지역의 상대적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방대학의 위축은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2월,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정책을 발표하였다 (박관규, 2024). 2024년 12월 제4차 RISE 위원회에서 17개 시도별 5개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이 정리되었고, 2025년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지자체 주도 계획수립, 지역 특화분야 선택과 집중, 성과지표 기반 배분·평가이다. 따라서 대학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23; 하봉운, 2025). 이러한 접근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지역혁신체계(RIS)에 고등교육을 접목시킨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획일적인 대학재정지원 방식이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차성현, 2024; 지방시대위원회, 2023.9.14.).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 정책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나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차성현, 2024). 이전에도 정부는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대학과 지역혁신체계를 지원했지만, 라이즈 사업의 핵심은 중앙부처의 여러 사업을 라이즈 센터로 통합하여 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즈센터를 통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재정은 중앙-지자체 매칭 성격으로 구성되며, 성과관리 체계는 4대 프로젝트

와 6대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체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 라이즈 사업 전략과 목표



출처: 교육부, 2023

운영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도는 지역 산업·인구·고용 구조를 고려한 대학혁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대학은 지자체·산업계·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통합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시도 RISE추진체계에서 1차 심사·조정을 거친다. 셋째, 교육부 및 중앙평가체계가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교부·배분을 확정한다. 넷째, 연차평가와 중간점검을 통해 성과를 환류하고, 차년도 교부에 반영한다. 이러한 전국 시행계획과 지원전략은 2024

년 하반기 보도자료와 2025년 상반기 고등교육 현안자료집 등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RISE는 단순한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지역혁신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지역산업, 지자체, 대학 간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인재 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하봉운, 2025).

RISE의 핵심내용을 재정, 지역대학, 규제개혁, 추진체계로 나누어 살펴본다(박관규, 2024). 먼저 재정은 지방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인재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시·도가 설립·운영하는 법인 형태의 RISE 센터에 예산을 출연하고, 해당 센터가 관련 재정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교육부, 2023.2.1.; 박관규, 2024). 교육부는 전체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약 2조 원을 RISE 체계를 통해 운용할 계획이며, 이 체계에 통합될 수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혁신플랫폼(RIS),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평생교육체제지원(LiFE), 지방대학활성화사업 등이 포함된다(교육부, 2023). 2023년에는 7개 시·도를 대상으로 RISE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10개 시·도에서 RISE센터 설립을 본격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기반을 다지는 기간으로 설정되었다. 2025년부터는 RISE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 예산안에는 약 1.2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이 RISE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범 운영된다(교육부, 2023.9.29.; 박관규, 2024). 이 예산은 중앙 RISE센터인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각 시·도 RISE센터에 출연금 형태로 전달되며, 구체적인 배분 방식과 기준은 현재 한

국연구재단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 중이다(박관규,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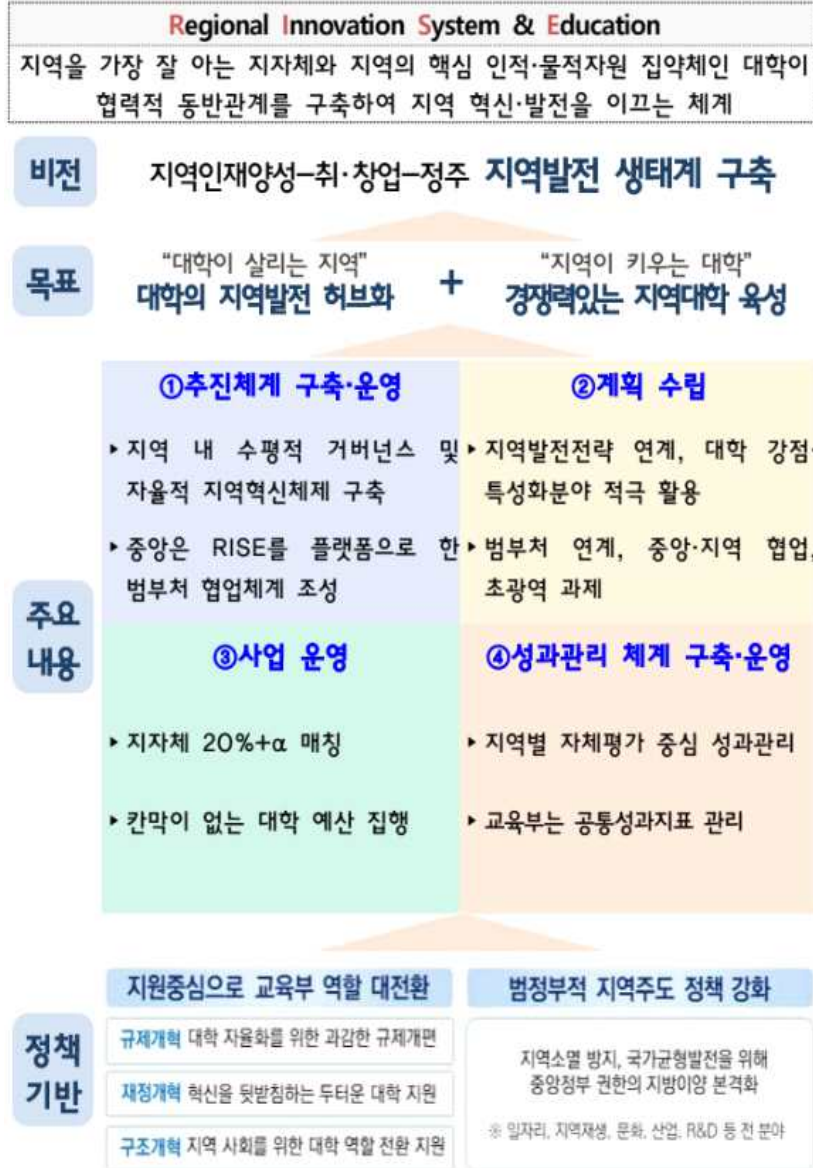
둘째,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학을 육성한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지역발전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과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반영하여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교육부, 2023).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재정 분배를 넘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지역발전 계획 수립이 강조되며,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다양한 특구 체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교육부, 2023).

셋째, 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시범지역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명시된 ‘고등교육혁신특화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RISE 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는 사전 협의와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지역대학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부, 2021; 교육부, 202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특례로는 겸임교원의 학기 단위 임용 허용, 별도 채용 절차의 도입, 학교 외부에서의 이동수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학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지역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이 있다. 이는 지역대학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이다(교육부, 2021; 교육부, 2023). 아울러 교육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의 정비를 통해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학규제개혁 협의회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핵심 법률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타 부처가 관할하는 대학 관련 규제-예컨대 대학 재산의 관리,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23).

넷째, RISE 정책의 실행을 위해 각 시·도는 대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있으며, 기존의 평생교육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RISE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담부서는 지역 내 대학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도별 자율운영이 가능한 조직과 인력 범위 내에서 구성된다. 시범운영을 통해 적정한 조직 형태와 인력 규모를 산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교육부, 2023). 아울러 시·도는 지역 주도형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집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되며, 이 기관은 RISE 사업의 기획, 세부 시행계획 수립,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 교부, 성과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대응하여 교육부는 중앙 RISE 센터를 설립하여, 각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고 국비 교부, 사업 선정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교육부, 2023). 또한 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고등교육 및 대학지원 관련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RISE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는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한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교육부, 2023).

[그림 5] RISE 비전 및 목표



자료: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75&boardSeq=10315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16&opType=N>

인문사회분야 관점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우선 RISE의 성과관리 프레임이 “산업·고용·창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인문사회 기반 연구활동과 학술생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25년 발표된 교육부의 RISE 사업 성과관리방안(교육부, 2025)을 보면 성과평가는 지역별 자율성과지표 달성도(정량), RISE 추진과정 평가(정성)와 더불어 공통성과지표 달성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 지표명과 정의, 그리고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9] RISE 사업 성과관리 방안

지표명	정의	가중치	
		중간평가	종합평가
지역별 대표 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	지역 자율성을 강조하는 RISE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 시그니처 과제 성과를 평가에 반영	0.5	0.3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	지산학연 협업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혁신 실적인 창업·지식재산권 등 창출 평가	0.25	0.1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가능할 수 있도록 성인 학습자 인적자원개발 정도 측정	0.25	0.1
지역정주 취업 증가율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대학의 혁신이 취업 및 정주로 연결되는 성과를 측정	-	0.15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	RISE로 인한 지역혁신성과 만족도를 지역주민과 사업참여자의 시각에서 측정	-	0.15
대학의 지역경제 영향력 증가율	IMPACT 평가로, RISE 체계를 통해 성장한 대학의 지역사회경제 기여도 종합적 측정	-	0.2

출처: 교육부 (2025) RISE 사업 성과관리방안

이러한 지표들은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 항목으로, 연구성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인문사회분야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특히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보면 창업기업의 수, 기술이전 건수, 산학 공동 논문, 지적권 실적 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교육부, 2025) 이러한 지표들은 기술혁신과 산업화가 중심이 되는 공학·자연과학 분야에는 유리하지만,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창업이나 특허, 기술이전 등으로 성과를 제시하기 어렵다. 인문사회계 연구는

주로 정책제안, 제도개선, 문화적 자산 창출,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 비경제적·비물질적 산출물을 생산한다. 그러나 RISE의 현행 성과관리 체계에서는 이러한 비계량적 성과를 포착할 수 있는 항목이 부재하거나, 정성평가 항목에서도 실질적인 가중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공통성과지표의 경우 RISE 성과관리에서 공통성과지표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등의 공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통계는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취업통계」, 「산업연관표」 등 이공계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계의 교육·연구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은 이러한 데이터 체계 내에서 포착되지 않는다.

즉, 인문사회 분야의 활동은 측정가능한 데이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자체의 출발점에서부터 불리하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 체계가 오히려 학문 간 불균형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RISE 사업은 이러한 평가에 기반하여 재정 환류 (인센티브 또는 감액)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과학기술 중심 대학은

창업·기술이전·산학협력 등의 정량적 성과를 통해 높은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인문사회 분야는 정성적 성과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환류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인문사회 분야는 장기적으로 재정 축소와 역량 약화의 악순환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아울러, RISE 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학혁신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설치된 지역 RISE 센터를 핵심 거버넌스로 설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중앙 RISE센터를 두되, 평가, 조정, 컨설팅 기능에 집중하며 실제 사업의 설계·집행·성과관리는 지역 단위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앙집중형 대학재정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지역 간 재정 여건·행정역량·산업 기반의 불균형이 RISE 성과의 격차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아래는 각 지역별 라이즈센터의 현황과 사업비의 현황을 정리해본 것이다. 각 대학 및 컨소시엄별로 규모가 다양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지역 간의 사업예산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향후 평가를 통해 예산이 차등지원될 때 앞서 본 것처럼 이공계 중심,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지역으로 예산이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지역라이즈센터 예산 및 사업비

시·도	지역라이즈센터	조직구성	참여 대학 및 총 사업비 (2025년 단년 기준)
경남	경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	3팀 20명	19개 대학 총 1,027억원
경북	경북연구원	4팀 13명	29개 대학 총 2,205억원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4개팀 17명	10개 대학 총 765억원 (국비 653억, 시비 112억)
부산	부산라이즈혁신원	2개본부 22명	25개 대학 총 1,341억 (국비 940억, 시비 401억)
전남	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	2부 5팀 21명	11개 대학 727억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2국 4부 19명	14개 대학 1,031억원 (국비 1,076억, 도비 225억)
충북	충북연구원	3팀 15명	27개 대학 919억
경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개 본부, 4팀, 20명	67개 대학, 636억
서울	서울연구원	4개팀, 20명	35개 대학, 총 765억 (국비 565억, 시비 200억)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2팀 9명	
충남	충남라이즈센터	3팀 15명	22개 대학, 총 1,403억원
강원	강원인재원	1센터 1부 3팀, 17명	16개 대학 총 924억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3팀 총 14명	13개 대학, 680억원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2부 4팀 17명	3개 대학 416억원
광주	광주라이즈센터	3팀 10명	17개 대학 749억
울산	울산라이즈센터	자료없음	3개 대학 410억원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1과 5명	12개, 214억 (국비 183억, 시비 31억)

출처: 각 라이즈센터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검색 후 작성

### (3) 글로벌 대학사업의 특성과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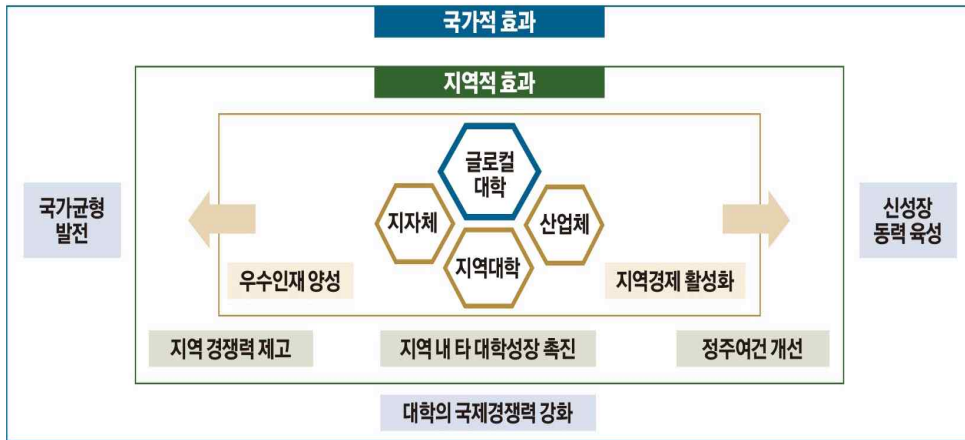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23.4.). 한국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근본적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 지역대학의 쇠퇴, 수도권 집중 등으로 자율적 혁신의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글로벌대학30의 추진 방향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교육부, 2023.4.). 첫째,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대학 자율형으로 전환이다. 정부가 정한 틀에서 벗어나 대학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안을 설계하는 것이다. 둘째, 분절적 사업에서 통합적 지원으로 개편한다. 예산 칸막이를 없애고 대학 단위의 종합지원으로 전환한다. 셋째, 규제 완화이다. 정원조정 자율화, 평가제도 개편, 학사제도 자율화 등 규제 혁신을 병행한다. 넷째, RISE 체계와 연계이다. 지방정부에 대학지원 권한을 이양, 지역 주도의 대학-산업-사회 협력 기반 조성한다. 글로벌대학30의 비전은 국가-지역-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동반 상승하는 것이다(교육부, 2023.4.). 이를 위해 대학 내부의 대학 구조와 운영 혁신을, 대학 외부의 지원 전략 혁신을 통해 학과 간·대학 간·국내외 간의 벽을 허물어 혁신적 대학 생태계 조성하고, 대학-지자체-산업계의 파트너십 구축하며, 지역특화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대학30은 전국 지방대 중 30곳을 순차적으로 선별하여 1000억원을 향후 5년간 지원한다(교육부, 2023). 즉, 1년에 200억원씩 소요되는 것이다.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들은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과 운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김종영, 2024). 2023년 추진방안 발표 이후 2025년에는 예비 지정 결과가 5월 발표되었고, 9월 본지정으로 7개 모델(9개 대학)이 최종 선

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지역-대학 공동브랜드”, “대학 통합·연합”, “규제혁신 패키지”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한다. 예비지정-본지정의 2단계 절차, 혁신기획서 평가, 분야 간 연합모델 가산점 등이 제시되었으며, 2025년 지정계획(결재본)과 혁신기획서 작성지침이 공개·운영되었다. 사업의 심사·평가 체계는 교육부-글로벌대학위원회-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삼중 구조로 운영된다. 2024년 본지정 평가 시에도 전문기관 위탁, 외부전문가 위원회 구성, 합숙평가 등 절차가 적용되었으며, 2025년에도 동일 프레임이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대학별 성과·계획의 차이를 반영하여 최종 본지정 수가 7개 모델로 축소되는 등, 엄격한 경쟁구조가 확인된다.

[그림 6] 글로벌 사업 개념도

‘글로벌대학30’사업개념도



자료: 교육부, 2023. 4.

글로벌대학30의 추진전략은 대학의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서 검토할 수 있다 (교육부, 2023.4.). 먼저, 대학 내부의 구조와 운영 혁신이다. 첫째, 산학 협력 허브화이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 문제해결형(PBL) 수업을 확대한다. 둘째,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이다.

구체적으로 무학과제, 융합전공, 자기주도설계전공 등 학생 맞춤형 제도를 활성화한다. 셋째, 개방형 거버넌스이다. 지자체·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혁신체계 마련이다. 총장 중심의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넷째, 성과의 투명한 공개이다. 대학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역사회 기여도(Impact) 분석·공개한다. 다음으로, 대학 외부의 지원전략 혁신이다(교육부, 2023.4.). 첫째, 선택과 집중이다. 강한 혁신 의지를 가진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성공 모델을 창출한다. 둘째, 범부처·지자체 협력이다. 규제특례가 가능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 도입, 각 부처·지자체의 재원 및 행정 지원을 집중한다. 셋째, 재정 지원 규모와 관련, 대학당 5년간 약 1,000억 원(1차년도 50억, 2차년도 100억 등)을 지원한다. 넷째, 산업계 협력이다. 산업계 인력을 대학 교원으로 활용, 현장 실습 및 취업 연계를 추진한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민간전문가 중심의 ‘글로벌대학위원회’ 운영한다. 여섯째, 스마트 성과관리이다.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및 공공데이터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글로벌 대학의 중요한 부분은 대학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적인 성공 모델을 창출해야한다는 점이다(김종영, 2024). 즉 대학은 특성화 분야를 정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지자체와 지방기업과 연계한 지산학 연계의 공고를 기반으로 해야한다. 예를 들면, 경상대의 경우 글로벌 대학으로 우주항공방산 분야에 집중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지자체인 경상남도는 라이즈센터를 설치하여 글로벌 대학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중앙일보, 2025)<sup>13)</sup>. 그리고 대학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으로 보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글로벌 대학과

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562>

라이즈 사업의 핵심적인 차이는 추진 주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대학은 지산학 연계를 중요시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대학의 내부 구조 (전공 등) 개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라이즈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역 여러 대학을 통합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표 11] 글로컬 대학 비전

## 【비전】 국가-지역-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동반 상승

-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 간, 국내외 간 벽 허물기
  -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
  - 글로벌 수준의 대학-지역 동반 성장 모델 선도
- ⇒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 **글로컬대학 30교** 내외 육성

글로컬대학 :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 【대학외부】 지원 전략 혁신

### 【대학내부】 대학 구조·운영 혁신

#### ① “선택과 집중” 전략

대학 혁신 성공모델 창출 지원을 통한 대학 혁신의 방향 제시

#### ① 산학·지역 협력의 중심(허브)화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연구·창업 등 추진

#### ② 범부처·지자체간 장벽 없는 지원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 범부처·지자체 재원 집중 지원

#### ② 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학외자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  
지역사회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학사 운영 및 내부 체제 개편

#### ③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 지원

민간전문가(글로컬대학위원회) 주도로 계획 수립부터 지정·평가·지원 추진

#### ③ 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총장의 혁신 리더십 지원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체계 구축

#### ④ 지능형(스마트한) 지정 및 성과관리

대학이 부담 없는 지정·관리 방식,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 ④ 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대학의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성과 분석 및 대국민 공개

출처: 교육부, 2023.4.

이러한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글로벌 사업의 경우 교육부에 공모 지침서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혁신 모델’, ‘산업수요 중심 교육과정 개편’, ‘산학연협력 및 기술사업화 강화’ 등의 문구들이 강조되어 등장하고 있다(글로벌대학사업 사업수행지침서, 교육부). 또한 실제로 2024년 글로벌대학 사업 본 지정대상에서 선정된 10개의 대학의 주요 제안 키워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2] 2024 글로벌 대학 본지정 대학 핵심키워드

대학	유형 (단일/연합)	핵심산업 및 키워드	비고
건양대	단일	국방산업 중심, 시험/인증/실증 중심 교육산학협력	기술·공학중심
경북대	단일	대학원 중심체질 전환, 연구몰입환경 조성	연구·공학혁신
목포대	단일	친환경 무탄소 선박, 그린 해양에너지 분야 특화	에너지·해양공학 중심
창원대 거창대 남해대 승강기대	통합	창원 국가산단 R&D- 제조·스마트제조·승강기 산업연계	제조·공학 중심
동아대 동서대	연합형	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지역산업연계	융합공학·바이오
대구한의대	단일	한의학+지역사업화+해외협력 사업 추진	헬스케어 중심
인제대	단일	교육·문화·건강·산업수요기반 특성화	산업공학+헬스 케어 연계
한동대	단일	글로벌 교육모델+AI디지털 혁신 교육모델 제시	AI공학 중심

출처: 연구진 정리

글로벌대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대학혁신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 평가기준과 선정사례를 보면 산업수요·기술혁신 중심의 구조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인문사회·예술 분야는 지역사회 통합이나 문화혁신이라는 핵심 가치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2024년 글로벌대학 사업의 선정 결과는 지역대학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 이공계 기술혁신 중심의

산업대학 모델을 제도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선정 대학 대부분이 AI, 바이오, 제조, 에너지 등 기술산업 분야를 중심축으로 삼았으며, 인문사회 및 예술분야는 지역공동체 혁신의 주체로서 배제되거나 보조적 역할로 한정되었다. 이는 대학정책의 산업화 편향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Ⅲ. 연구지원체계 및 연구사업성과 평가: 문헌연구

### 1. 개요

본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 체계와, 연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연구지원체계의 경우 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의 비료를 중심으로 하여 인문사회계의 현실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대형 연구지원 사업인 BK21Plus, HK사업,SSK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평가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한다. 본 장에서는 문헌 연구의 결과를 담고, 전문가 인터뷰는 별도의 장으로 소개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평가 틀을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책보고서, 평가보고서, 성과분석 보고서 등 공식 문서를 분석하여 사업의 목표 달성도와 성과를 파악하고,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KCI, RISS 등)를 통해 각 사업에 대한 학술적 평가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연구재단 웹사이트, 사업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체평가보고서와 중간평가 보고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지원체계에 대한 평가는 인문사회연구지원 분야와 과학기술분야 지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두 분야 간의 예산 및 행정체계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양적인 평가에 대한 분석과 질적인 평가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한다. 양적인 평가는 논문 편수, SCI 논문 비율, 공동연구 실적, 참여 인력의 규모, 사업의 지속률 등을 살펴보고, 질적인 평가는 학문 분야에 대한 기여도, 인력양성의 질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지원체계 평가: 인문사회연구지원과 과학기술분야지원 간 비교를 중심으로

### 가. 예산 비교

우선 예산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문사회 연구지원과 과학기술분야지원 간에는 현격한 예산 격차가 존재한다. 연구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지원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구분야별 연구비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학기술분야는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농수해양학의 합계이며 인문사회계 분야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합계이다. 기타 항목에는 체육·예술 관련과 융합분야가 포함된다. 과학기술분야의 사업비는 약 4조에서 약 5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문사회 연구의 사업비는 2,234억에서 2,774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과학기술분야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의 사업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사업비와 인문사회분야의 사업비 격차는 2020년 18.3배에서 17.6배로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사업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사업비의 5%-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연구분야 분류에 따른 연구비 추이

(단위: 억원)



출처: 한국연구재단 조사데이터 통합시스템 (<https://krd.nrf.re.kr/inu/krs/rnd>)

과제당 평균 연구비를 비교하면 격차를 더욱 상세히 볼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우수신진연구는 최대 2억 5천만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a), 중견연구는 연간 최대 9억원, 리더연구는 최장 10년간 최대 150억원 까지 지원된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2). 반면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지원 사업은 연간 5천만원(간접비 포함), 중견연구는 연간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신진연구는 연간 2천만원 이내 수준이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5a, 2025b).

## 나. 지원행정체계 비교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분야의 지원행정체계에서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은 연구 사업의 구조에서의 차이점이다. 과학기술분야는 생애기본연구, 우수연구, 리더연구 등 연구자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구조, 즉 생애주기형 연구지원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b). 반면 인문사회 분야는 학문후속세대 지원, 개인연구, 공동연구, 인문학진흥, 신진연구, 중견연구 등 단계별 성장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한국연구재단, 2025a;2025b). 또한 연구 기간에서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리더연구는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글로벌 리더연구나 중견연구도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가능하나, 인문사회 분야는 대부분 1-3년의 단기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우수학자지원사업의 경우 5년 지원이 가능하다(한국연구재단, 2025a).

두 번째는 연구지원 체계에서의 차이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인문사회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계의 연구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연구재단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경우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권향원·김진선(2021)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부 학술진흥과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본부의 부서들은 둘 다 사업기능(실제적인 연구사업의 집행 및 연구사업관리)과 관리기능(전략·제도·경영)을 수행하고 있는 구조로 분석하였다. 즉 인문사회분야 연구의 경우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관계가 기획-집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기획과 집행을 기능을 동시에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정책-집행’의 수직적 분리 구조를 가져야 하나, 현행 체계에서는 양 기

관 모두가 정책과 집행의 중간지대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구조로 인하여, 연구사업의 중장기 방향성 설정, 예산편성 및 심사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동일 사업에 대해 기관별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평가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행정적 중복과 절차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연구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교육부는 학문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 심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제 과제 공모, 심사, 평가 체계는 연구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양 기관 간 조정과 정보공유가 제한적이다. 그 결과, 사업 목적과 지원기준 간 불일치, 성과지표의 중복 또는 상이한 기준 적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요약하면, 교육부 학술진흥과와 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간의 기능 중첩은 인문사회 연구지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진단된다.

반면 과학기술계의 경우는 과기정통부가 국가 R&D의 방향을 설정하고, KISTEP이 중장기 전략과 평가를 담당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집행을 담당하는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인문사회분야에서 정책적 연계성이나 중장기적 전략 수립의 측면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표 13] 교육부 학술진흥과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기능상 유사 중복여부 검토

기능구분		기능	부서	중복여부
교육부 학술진흥과	사업 기능	사업총괄	미분장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미분장	●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미분장	●
		학술단체 지원	미분장	●
		학술연구 실태조사	미분장	●
	관리 기능	전략	미분장	●
		제도	미분장	●
		경영	미분장	●
홍보		미분장		
한국 연구재단 인문사회 연구본부	사업 기능	인문학	인문학단	●
		사회과학	사회과학단	●
		문화융복합	문화융복합단	●
	관리 기능	전략	인문사회연구기획실	●
		제도	인문사회연구기획실	●
		경영	인문사회연구기획실	●
		홍보	인문사회연구지원실	
		시설	인문사회연구지원실	

비교대상 간 중복된 업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으로 중복의 여부를 표기함

자료: 권향원·김진선, 2021

### 3. 문헌 연구를 통한 연구사업 평가

#### 가. BK21사업의 성과

BK21 사업의 경우 우선 한국의 연구 경쟁력의 양적인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결과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선 1단계 사업(1999-2005)의 성과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김병주 외, 2005), 1단계 BK21 사업은 대학 사회에 경쟁적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안정적 교육·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 1조 3,4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72개 대학 438개 사업단이 지원을 받았다. 2006년도 통계에 따르면 약 1만여 명의 인력이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약 3만 건의 SCI(E)급 논문이 출판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SCI급 논문의 폭발적 증가였다. 1998년 9,444편에 불과했던 SCI급 논문 수가 2005년 23,515편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한국의 SCI 논문 순위는 1998년 세계 18위에서 2004년 세계 13위로 5단계 상승했다(정책브리핑, 2005)<sup>14)</sup> 질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업적 발표를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수준까지 확장시켰고, 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및 장기연수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 1단계 BK21 사업은 도이치 뱅크(Deutsche Bank) 연구소의 연구보고 및 미국 고등교육 전문지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등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2단계에서 더욱 확대되었다<sup>15)</sup>. 2단계 BK21 사업은 연구 중심대학 체제를 안정시키고 국부창출을 위한 핵심 분야의 고급인력을 집중

1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70087504>

15) 이하 내용은 한국학술진흥재단, 2단계 두뇌한국21사업 종합성과분석보고서(2008)에 기반함.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74개 대학 총 244개 사업단 및 325개 사업팀이 선정되어 7년간 총 2조 3백억 원을 지원받았다. 매년 우수 석·박사 인력 2만 명 이상을 지원했다. 과학기술분야 SCI(E)급 논문 수는 6년간 참여교수가 15.7%, 신진연구자가 38.1%, 참여대학원생이 62.8% 증가했다. 참여 교수진의 논문 영향력 지수(IF)는 35.9% 증가했고, 참여 대학원생의 IF는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3단계에서는 이전까지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질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학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환산 논문 편수와 환산 보정 IF, ES(Eigenfactor Score)를 도입하여 정량 지표의 정성화를 이루었다(한국연구재단, 2024). 3단계 BK21플러스 사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총 1조 4,840억 원 규모로 연간 2,526~2,7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약 500개 내외의 사업단(팀)을 지원했다. SCI급 논문 참여 교수 수는 1999년 4,392명에서 2017년 2만 4,968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참여 학생 수는 2013년 1,615명에서 2017년 1만 3,687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동아시아언스, 2019)<sup>16)</sup>. 또한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100위권 내 대학에 한국 대학이 5개, 200위권 내 대학에 7개가 오르는 성과를 얻었다. 3단계 중간평가 이후부터 참여교수 1인당 SCI 환산 논문 편수 대신 논문의 환산 보정 IF 배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단(팀)의 대표 논문실적 평가를 강화하는 등 질적 평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3단계 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김병주 (2018), 김보라 외 (2020)의 연구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미참여학생에 비해서 논문의 수가 많았으며 연구수행능력에서도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국제화 인프라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BK21의 3단계 사업이 대학원생들의 연구력 증진과 국제경쟁

16)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32750>

력을 키워주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단계 사업의 경우 연간 4,080억 원, 총 2조 9,000억 원 규모로 3단계보다 연간 약 1,380억 원 증가했다. 2020년 출범 당시 68개 대학 578개 연구단이 선정되었으며, 연간 1만 9,000명에서 최근 2만 3,000여 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고 있다. 4단계의 가장 큰 혁신은 연구 실적 평가에 정성평가 100% 도입이다. 선정평가(20년)에서는 정성평가 70%, 정량평가 30%였으나, 중간평가(23~24년)에서는 정성평가 100%로 전환했다. 연구자는 참여교수 1인당 1~3건의 대표연구업적물과 2건 이내의 기타연구업적물(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업적물의 우수성을 500자 이내로 기술한 평가자료를 제출하며,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둔 평가를 받는다(한국연구재단, 2024). 평가의 핵심 주안점을 우수성 창의성, 혁신성, 해당 전공분야 기여도, 지역산업 기여도 등으로 숫자 너머의 학술가치와 파급효과를 주목하고 도전적 장기적 연구의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성과로 볼 수 있다.

BK21사업은 연구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하면서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이공계 중심 구조 속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상대적 비중이 낮게 유지되었다. 2005년 기준 전체 참여 인원의 78%가 이공계 연구단 소속이었으며, 인문사회계열은 연구단 수는 많았으나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연구성과 측정지표가 SCI·SSCI 논문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문사회분야에서는 논문 외 학술저서, 번역서, 비정량적 산출물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하였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학위논문 이외의 학문적 산출물(번역, 자료집, 비평 등)이 성과로 인정되지 않아, 연구자의 학문 활동이 단기성과 위주로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교육부, 2019). BK21Plus 사업으로 확대 개편된 후에는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참여 확대가 시도되었으며, 인문학·사회과학·예술체육분야의 독립 평가체계가 마련되었다. 평가항목에는 국제협력 실적, 저술활동, 문화콘텐츠 개

발, 사회기여도 지표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예산 규모는 여전히 이공계 중심 구조 속에서 제한적으로 배분되었다. 2009년 기준 인문사회분야 예산은 전체 BK21 예산의 약 12%에 불과하였다.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단의 수를 살펴봐도 인문분야는 이공계 분야의 1/4 - 1/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문사회의 연구단은 1단계 42개 연구단에서 4단계 87개로 증가했으나 이공계의 경우 220개에서 391개로 증가하였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학문분야별 참여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4] 학문분야별 참여현황

구분	인문사회	이공	예술체육	의약학	합계
1단계 (1999-2005)	42개 연구단	220	25	13	300
2단계 (2006-2012)	49개	262	30	12	353
3단계 (2013-2020)	68개	362	46	24	500
4단계 (2020-2027)	87개	391	85	48	611

종합적으로 볼 때, BK21사업은 ① 대학원 중심 연구인력 양성체계 구축, ② 연구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정착, ③ 이공계 중심 속 인문사회분야 참여확대의 시발점, ④ 연구단 기반 행정체계의 제도화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BK 사업을 통해 대학원 교육의 체질을 연구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 연구인력 양성, 국제화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대학 내

연구단위의 운영경험이 향후 인문사회분야의 HK·SSK사업으로 확산되는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BK21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연구기반을 제도화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이후의 학술연구지원체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사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공계 중심의 평가구조, 인문사회분야의 재정 비중 부족, 성과지표의 단기성과 편중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나. HK 사업 성과

HK사업의 연구성과물은 저서, 학술지 논문, 학술회의 발표 등으로 구분되며, 저서의 경우 단독저역서는 3편, 공동저역서는 2편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한국연구재단 HK사업 총괄평가 편람, 2019). HK사업의 특징은 인문학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실적, 협동연구 수행 정도, 국제적 인적교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HK사업의 평가체계는 BK21사업의 구조를 계승하면서도, 인문학 특유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높였다. 정량평가에서 200점, 정성평가에서 300점을 배정한 것이다. 1단계에서는 논문, 저서, 학술대회 개최 실적이 중심이었으나, 2단계에서는 사회기여도, 지역협력도, 대중화 활동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평가는 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에서 구성한 전문평가단이 수행하며, 성과평가 결과는 사업 재지정 및 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표 15] HK 사업 성과지표 (요약)

구분	성과지표	세부내용
학문적 성과	논문, 저서, 번역서	기초학문 연구성과
후속세대 양성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수	연구소 내 고용 및 양성인원
국제협력	해외학자 교류,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건수
사회확산	지역인문학프로그램, 인문도시사업	지역사회 연계활동 실적
연구기반	연구인프라 구축, 학술총서 출판	연구소 내 장기성과물

HK사업은 인문학 연구소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제도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HK교수 및 HK연구교수 확보·활용 실적, 정년직위 보장 이행의 적정성 등 인적 기반 구축 관련 지표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인문한국지원사업은 10년간 연간 약 8억 4천만원(간접비 포함)씩 지원되는 대형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제공하여 인문학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5).

2007-2022년 기간의 HK 사업 43개 과제, HK+ 41개의 총 84개 과제가 지원되었다. HK 사업에는 최장 10년간 98억 원이 지원되었고, HK+ 사업에

서는 최장 7년간 39억원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예산 투입으로, 13,404편의 논문, 4,046편의 저서, 9,018번의 학술회의가 개최되는 성과가 있었다(윤석준 외, 2023). 6,172회의 대중강좌, 2,699회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1,389회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연구성과의 확산과 국제화,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효과가 나타났다(윤석준 외, 2023).

연구책임자의 전공은 문학, 역사 등 인문학 분야가 65%, 정치, 사회, 여성 등 사회과학 분야가 35%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간 융합접근이 진행되었다(윤석준 외, 2023). HK 전임교원의 전공은 인문학 77%, 사회과학 21%, 기타 건축, 환경, 정보통신 등도 포함되어 자연과학이나 공학과의 융합도 진행되었다(윤석준 외, 2023). 연구성과 주제는 문화, 중국, 사회, 일본, 한국, 문학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한중일 3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연구가 많았고, 시기별로는 근대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윤석준 외, 2023).

또한, HK 사업은 지역인문학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인문학적 성과를 확산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는데, 대중인문강좌 이외에도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지역민 대상 다양한 시민인문프로그램의 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평생 인문교육 추진, 그리고 초·중등 인문소양교육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는데, 해외 연구소 및 대학 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국제학술지 발간 및 Scopus 등재, 세계 학술대회 주최 및 국제공동저술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예시로,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근대한국학 메타DB’의 구축 과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연세 근대한국학 HK+ 총서』를 출간하고 있다. 총서는 ‘디지털 한국학 총서, 연구총서, 번역총서, 자료총서, 대중총서’ 등으로 구성된다. 디지털한국학

총서는 근대한국학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인문학적 방법론과 그에 입각한 계량적 분석 결과 및 실제 자료를 담았고, 연구총서는 디지털한국학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새롭게 확인한 근대한국학의 지적 기반과 계보를 정리했다. 『디지털인문학과 근대한국학』,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 『조선연구문헌지』 등의 총서를 발간했으며 우수한 한국학 성과를 해외에 번역하여 소개하는 해외한국학 총서 사업을 진행해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Fiction (1890-1945): The Topography of Literary Systems and Form* 등을 출판했다. …… 근대한국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연구를 통해 구축한 인문학적 콘텐츠를 지역인문학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지적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한국 근대인 열전〉, 〈근대한국 풍경〉, 〈한국 근대 고전의 향연〉, 〈동아시아 인문학의 월경〉 등 총 139개 강좌를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으로 개발 운영하였다. 강의 외에도 『근대한국학통신』을 발간해 매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인문한국연구소협의회·HK/HK+성과확산총괄센터, 2023)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칸막이된 학과 중심의 대학체제가 지배적인 한국 고등교육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학과 교수들과 융합적 연구소 설치와 융합 연구 추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강봉룡, 2018). 또한, 인문학 분야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어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한국 대학 내 인문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은 교육부 소관이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시민생활 및 문화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리되어 있어 사회적 공공재인 인문정신의 진흥과 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조성택, 2015). 21세기 한국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국립인문진흥재단(NEH)와 같은 인문학 진흥, 인문정신 확산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조성택, 2015).

#### 다. SSK 사업의 성과

SSK 사업은 소형-중형-대형의 단계별 성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 소형 연구팀은 3년간 매년 1억 원 이내, 중형 연구단은 4~6년차에 매년 3억 원 이내, 대형 연구센터는 7~10년차에 매년 7억 원 이내를 지원받는다. 2010년 첫 해에는 소형 연구팀 1년차 기준 연간 1억 원 이내로 시작했으며, 점차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2023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총 예산은 약 9,556억 원이며, 이 중 SSK 사업은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중장기 연구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4,191억 원으로, 사회과학연구지원(SSK)은 아젠다 중심의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교육부, 2023).

201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 선정 팀 중 2016년까지 31개팀이 운영 중이었고, 소형-중형-대형으로 단계별 지원체계에 의해 2016년에 최초로 대형연구센터로 진입하는 연구단이 최초로 탄생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는 약 40개의 대형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0-2021년 SSK 사업에 참여한 연구집단은 총 273개 연구단(팀)이다. 이들 연구단(팀)에는 총 2,863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예산 지원을 통해 장기적 연구수행으로 학문 발전에 기여, 사회문제 해결 가능한 연구 아젠다 설정, 사회과학연구의 활성화 공헌, 집단연구의 추진과 다학문적 접근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장완 외, 2023: 30-31). 같은 기간의 정량적 성과는 1,917편의 SSCI급 논문을 포함하여 10,843건의 학술연구 결과 발표, 15,332건의 성과확산 및 정책 연계, 29,440회의 네트워킹, 386명의 박사 배출 등 학문후속세대 양성되었다(고장완 외, 2023: 31). 또한 SSK사업은 네트워킹 및 협력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센터 간 아젠다 포럼, 연구집단 주도형 포럼, 리서치 트렌드 워크숍, 연구협력-연계 미팅 등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공·지역·아젠다간 경계를 넘어 자율적인 상호교류를 촉진하였다고 평가받는다(SSK 지원사업단, 2019). 또한 정책 기여 및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SSK 연구성과는 정부 각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 정책연계 포럼과 정책수요워크숍을 통해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정책화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언론홍보, 홈페이지 및 SNS 운용, 성과발표회 개최, 학술대회 주최 등을 통해 SSK 연구성과를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 언론 기고, 기획기사 연재, 멀티미디어 홍보를 통해 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SSK 사업은 연구센터/단/팀 Data Base 구축, 특성과 사례 조사, 네트워킹 기초조사 등 리서치 활동을 통해 사회과학 연구지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협력연구의 구조와 촉진 요인, 학제 간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SSK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장완, 2023: 33-36). 첫째, 인력운영상 문제점이다. 모든 유형에서 연구비 규모와 인력 확보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연구인력의 낮은 인건비로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또한 매년 평가가 이루어져 SSCI 논문보다 KCI 논문에 집중하는 문제가 계속된다. 연구비 규모나 연구비 사용 문제로 해외 학자와 협업이 어려운 문제가 나타난다. 둘째, 사업 지속에 대한 장애요인이다. 연구비 규모와 지원의 불안정성, 우수 연구인력 참여 유인 부족, 1년 단위 평가로 인한 SSCI급 논문 생산의 어려움, 연구비 집행의 어려움 등이 제기된다.

## IV. 연구지원체계 및 연구사업성과 평가: 전문가 조사

### 1. 전문가인터뷰 개요

전문가 인터뷰는 연구재단의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서면 조사를 시행하였다. 서면 인터뷰는 2025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을 수집하였는데, 총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 기간 중 일정을 고려하여 9명은 설문지 응답뿐 아니라 오프라인 토론회를 거쳤으며, 2명은 서면 인터뷰로만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대학교수 (조교수, 부교수, 교수 포함)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로 구성되었다. 학제 분야를 살펴보면 정치학, 행정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와 철학, 사학, 문학 등 인문학 분야 전공자들이 참여해주었다. 참여자의 직급은 교수 4명, 부교수 4명, 조교수 1명이며 연구기관은 연구위원 및 책임 연구위원급각 1명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들은 한국연구재단의 주요 연구지원 사업들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며, 그중 BK21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데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혹은 연수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SSK(사회과학기초연구) 사업에 조교로 참여한 사례, HK (인문학 연구교수)사업에 연구교수나 참여교수에 참여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대학원생부터 연수연구원, 교수 단계까지 다양한 포지션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 사업을 경험하였으며 참여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각 전문가들은 연구지원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현행 연구지원 거버넌스의 장단점, 인

문사회과학 분야 지원기능의 분리 필요성, 학문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면 인터뷰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참여한 연구지원 사업의 종류 (참여단계 및 기간)
2.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제도의 성과와 그 이유
3.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 이유
4. 현재의 한국연구재단 중심 연구지원 거버넌스의 장점과 문제점
5.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한국 연구재단 중심의 체계에서 전담기구의 설치 혹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원기능의 분리에 대한 의견
6. 기타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응답자들의 응답은 각 질문별로 정리하였으며, 응답을 종합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2. 조사 결과 분석

### 가. 연구지원 사업의 성과 및 기여

전문가들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 사업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언급하였다.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정적인 연구환경의 조성:** 연구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료의 구입, 현장조사, 연구 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한 인문학 분야 연구자들에게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 연구 수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아무래도 인문학은 돈 나올 곳이 적으니,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HK와 같은 사업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연구성과와 학술활동의 촉진:** 연구지원을 통해 대학원생이 국제학술대회 발표에 참여하고, SSCI 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했다. 실제로 BK21 사업은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항공비·숙박비를 지원하여 많은 학생들이 해외 학술대회에 발표하고 논문을 출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BK 연구원 시절 해외학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거 같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의 발표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력양성 및 일자리의 제공:** 연구지원 사업은 대학원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의 인력양성과, 신진연구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SSK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미취업 박사들에게 연구교수로서의 일자리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HK 사업을 통해 신진 연구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인력 활성화와 연구의 연속성을 도모했다.

*“HK 사업을 통해 신진연구자 시절에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도움이 되었죠”*

**협업과 교류의 촉진:**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하고, 교류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제간 협업과 교류가 활발해져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와 접근법이 도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였다. SSK사업 참여자는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언급하며 다학제 연구를 통한 학문적 성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학문 분야 활성화 및 성과확산:** 인문학 지원사업의 경우 인문학 분야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사회에 확산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HK 사업에 참여를 통해 신진 연구자들의 일자리 마련과 함께 인문학 분야의 활성화와 성과확산에 큰 도움이 되었죠”*

이처럼 전문가들은 연구지원 사업이 인문사회과학 연구자의 역량 강화와 학문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안정적인 연구환경, 인력양성, 협업과 성과 창출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나. 연구지원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한편, 전문가들은 현행 연구지원제도의 한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 요구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절차의 간소화:** 연구지원 사업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계획서, 중간·최종보고서 등의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연구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들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지원기간의 연장:** 지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사업은 3년, 최대 5년 정도의 단기지원에 그치기 때문에, 장기적 축적이 필요한 인문사회 연구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연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산규모의 확대 및 유연성의 제고:** 연구 예산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사용에 대한 제약이 많은 점이 개선과제로 꼽혔다. 또한 예산 사용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필요한 항목에 자유롭게 지출하기 어렵고, 소규모 예산으로는 연구의 폭을 넓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 기준을 유연화하며, 탈락 연구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가 및 성과지표의 문제점:** 성과 평가가 양적 지표위주로 이루어져 질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결과 보고서를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여 실제의 연구활동이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보고서 작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논문 수, 인용지수 등 과학기술 분야에 보다 적합한 지표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질적 연구 성과가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평가 기준의 개선과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인센티브 및 제도적 한계:** 일부 사업에서는 제도적 불합리가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HK 사업의 경우 판매용 학술도서 출판이 불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이 현실의 학술활동과 맞지 않으며,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여 교수들에 대한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낮아 연구자의 부담이 큰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연구자에게 공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HK 교수라고 해도 실제 대학 내에서는 정식 교수로 대우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요약하자면, 전문가들은 연구지원 사업의 행정 부담의 경감, 장기 및 대규모 과제의 지원확대, 예산 유연성의 제고, 평가체계의 개선, 제도적 불합리 해소 등을 주요개선과제로 꼽았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연구지원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연구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다. 한국연구재단 중심의 연구지원 거버넌스의 장점과 문제점

현재 한국연구재단(KRF)이 주도하는 연구지원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

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체계적인 관리와 일관된 제도 운영:** 한국연구재단 중심의 체계는 국가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비 지원이 중앙기관을 통해 체계화되어 있어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연구 수행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연구 성과의 관리와 평가도 일정한 기준 아래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거버넌스가 단일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일관된 제도와 관행이 형성되어 연구자가 행정 등 잡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협력체계의 활용:** 일부 전문가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에서 분야별 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자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시도를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서, HK 사업의 경우 HK 협의회를 통해 참여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등 중앙기관 주도하에 현장의 소통과 협력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반면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과학기술 중심 편중 및 인문사회과학의 소외:**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현행 연구지원 체계가 이공계 중심으로 설계되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예산 배분, 행정절차, 평가지표 등이 이공계의 연구 상황에 맞추어져 있어 인문사회과학 연구자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도 이공계 제도에 익숙하여 인문사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소외와 지원부족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평가 지표가 다분히 이공계에 치중되어 있고 예산 행정 등이*

*인문사회과학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단기성과중심 및 장기연구의 제약:** 연구지원 사업이 지나치게 단기성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성과도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과제 지원 기간과 평가 주기가 짧아 장기 연구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연구의 깊이와 창의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행정부담 및 비효율:** 앞서 사업 차원에서 언급한 행정부담의 문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문제로도 지적되었다. 중앙집중식 거버넌스는 일관성은 있지만 행정절차와 보고 체계가 과중하여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지원을 중앙 기관에서 관리하다보니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비효율도 문제로 꼽혔다.

**평가의 획일성:**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평가체계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연구재단 중심의 평가는 논문 수, 인용수치 등 획일적 지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여, 창의적이고 질적인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평가 기준은 과학기술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고유한 성과지표의 개발 부족을 드러내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 일부 전문가는 연구 자원이 수도권 및 대형 연구 기관에 집중되고, 지방대학이나 소규모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대우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중앙기관 중심의 지원은 규모의 경제를 내세우지만, 동시에 지역 간, 기관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었다.

요약하자면, 한국연구재단 중심의 단일한 연구지원 거버넌스의 장점으로 는 체계와 일관성, 안정적 지원 등이 꼽혔으나, 문제점으로는 이공계 중심의 편중, 단기성과 지향, 행정부담, 평가의 한계, 자원 배분의 불균형 등이 지적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에게 제도적 불만족으 로 초래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담기구의 설치 또는 지원기능 분리에 대 한 의견

현재까지의 상황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담기 구의 설치 혹은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지원기능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 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담 지원기구 설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문 영역 간 불균형 해소:** 지금까지 국가 연구지원은 이공계 중심으로 설계·집행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 되고 지원규모나 기회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담기구의 설립은 이러한 영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문사회 연구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 하다는 것이다.

*“현행 평가지표가 이공계에 치중되어 있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적합한 성과지표 창출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사회과학의 특수성 반영:** 인문사회과학은 연구의 성격과 성과 도출 방식이 자연과학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많았다. 인문사회과학 연구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기 어렵고, 질적 성과가 중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적/지속적 지원체계와 질적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화된 지원조직이 인문사회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든다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난제해결을 위한 학문적 기반 강화:** 기후 위기, 불평등, 고령화, 인공지능 윤리 등 복합적 사회문제는 과학기술적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인문사회적 해석과 정책적 대안,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연구를 전문적으로 기획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연구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획력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학제간 융합연구의 촉진:**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융합연구는 국가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지만, 오히려 현재와 같이 하나의 체계 내에 존재하는 것이 체계적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의 통합관리체계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워 연구 기획보다는 예산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오히려 융합연구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해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기획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기구들간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융합연구를 도모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었다.

**연구생태계의 자율성과 지속성 보장:** 일부 전문가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담기구가 연구 생태계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였다. 중앙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의사결정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 현장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기구의 신설보다 단계적인 접근을 제안하기도 했다.

*“단기적으로 연구재단 내에 인문사회학술진흥본부 등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개편을 시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담기구 신설 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기 보다는 연구재단 내부에서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이 비용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렇듯 체제 개편의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특화된, 전담 지원 기능의 강화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공감하는 방향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담 연구지원 기구 설치를 통해 영역간의 격차 해소, 맞춤형 지원, 사회적 기여 강화, 융합연구의 촉진, 연구 생태계의 안정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담기구는 현행 한국연구재단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문사회과학 연구가 더욱 활기차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장치로서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기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문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앞서 언급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6]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구분	주요 개선 및 제언 내용
평가체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성과 중심 평가에서 장기·축적형 연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li> <li>• 양적 성과 중심의 획일적 지표 → 질적 성과·사회적 파급효과 반영하는 다원적 평가 필요</li> <li>• 인문사회과학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요구</li> <li>• 평가주기 연장 및 평가방식 다양화 제언</li> </ul>
장기·지속적인 지원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사회 연구는 장기적 축적이 중요 → 장기지원체계 마련 필요</li> <li>• 연구과제 지원기간 연장 및 후속·연속 연구프로그램 필요</li> <li>• 중견연구자 대상 지속적 지원 강화</li> <li>• 국가 차원의 장기연구계획 및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제언</li> <li>• 1회성 지원이 아닌 추가·확장 연구로 심화 연구 유도</li> </ul>
예산규모의 확대 및 투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사회과학 연구 예산 비중 확대 필요</li> <li>• 낮은 예산으로 인한 연구 범위·성과 제한 지적</li> <li>• 정부 차원에서 예산 투자 대폭 증대 요구</li> <li>• 예산 배분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필요</li> <li>•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관리 강조</li> </ul>
창의적 연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도전적 연구 장려 필요</li> <li>• 현 체계는 기존 성과 중심 → 신진 연구자에게 불리</li> <li>• 인프라 부족 연구자도 도전할 수 있는 창의·도전형 과제 신설 제언</li> <li>• 혁신적 연구 및 학문적 다양성 제고 목표</li> </ul>
인력양성 및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인재 양성 및 지속적 인력공급 위한 장학·연구비 지원 강화</li> <li>• 대학원생-박사후-신임교수까지 연속지원체계 구축 필요</li> <li>• 연구자의 학계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일자리 보장</li> <li>• 정규직 연구직 확대 통해 연구인력 안정성 강화</li> </ul>
학제간 융합 및 산학협력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제 간 융합연구 및 산학협력 제도적 촉진 필요</li> <li>• 융합연구 지원 프로그램 및 협력 플랫폼 마련</li> <li>• 인문사회 연구성과의 정책·산업 현장 활용 유도</li> <li>• 학술-정책 연계 메커니즘 구축 필요</li> </ul>
성과확산 및 평생학습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사회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강화 필요</li> <li>• 학술도서 출판·공개강좌·대중매체를 통한 성과 홍보 지원</li> <li>•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연구성과 활용</li> <li>•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문사회 연구의 사회적 환류 제언</li> </ul>

이상의 제언들은 모두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생태계 전반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도적·재정적·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문사회과학 연구가 더욱 활기차고 사회에 기여하는 학문 분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3. 소결

전문가인터뷰의 결과와 기존의 성과분석에 대한 보고서 고찰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지원 체계의 구조적 개편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원 기능을 분리하거나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연구지원 사업들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사업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원생 등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서 대학원생들과 신진연구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 것은 가장 큰 성과로 지목할 만하다. 학문후속세대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놓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 연구재단 사업들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성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연구 성과의 향상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재단의 여러 사업들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또한 학술대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들은 국제적 연구자들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해외 학술지에도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와는 별개로, 개혁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연구지원 거버넌스의 혁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연구재단 중심의 중앙집중식 거버넌스는 효율성은 있으나 현장 대응력과 영역별 특화 측면에서 한계를 지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여, 인문사회과

학 분야에 대해 보다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담기구의 신설과 같은 급진적인 변화 뿐 아니라 연구재단 내에서의 인문사회 연구기능을 위한 조직 분화와 같은 점진적인 변화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체계로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에 특화된 지원체계, 연구기획, 성과평가, 예산 지원 등이 타당하게 정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4. 연구지원체계 통합과 분리의 논리

### 가. 통합과 분리에 대한 기본 논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재단의 연구지원사업은 양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특히 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연구자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나 논의에서 제시된 통합과 분리의 논리를 재검토하고 연구지원체계 개선을 향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연구재단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것이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면서, 양 부처 산하의 연구지원기관들도 하나로 통합하는 조치가 단행된 것이다. 당시 중앙정부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통합을 통해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통합의 공식적 명분은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기초연구 시스템의 효율화 및 선진화’로 제시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법, 2009) 통합 초기부터 인문사회분야에서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2009년 6월 출범식에서 인문학 지원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였고, 이는 통합 재단이 과학기술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송위진 (2012)은 통합 이후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합 재단 체제에서 학문 분야 간 불균형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성지은·송위진 (2008)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통합 과정에서 부처 간, 분야 간 조정의 어려움을 분석하면서, 통합이 실질적인 융합보다는 형식적 결합에 그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통합 이후 15년이 지난 2024년 기준으로, 한국과학연구재단의 예산 구조는 과학기술분야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예산 약 9조 9,324억원 중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은 2조 5,911억원임에 더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은 2,810억원으로 전체 2.8%에 불과하다(한국연구재단, 2024). 연구자 지원의 규모를 보면 이 격차는 더욱 늘어난다. 2022년 기준 정부 R&D 투자 약 30조원 중 인문사회 분야는 약 3천억원으로 전체의 1% 수준이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문사회 분야의 R&D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3%로 전체 평균 증가율 8.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이강재, 2022).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재단 분리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성 특성, 그리고 실제 연구지원체계에서의 과학기술 분야 편중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며 인문사회계의 연구지원체계 분리를 주장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한국연구재단 분리 근거 검토

한국연구재단을 인문사회과학 연구지원체계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지원체계를 분리하고자 하는 논리적 근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연구재단(NRF)의 학제간 연구사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가 동일한 지원 메커니즘 아래 있음에도 연구주제 및 융합 관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드러났다(장재혁 & 윤장혁, 2017). 또한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의 특성을 다룬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중심의 평가 방식과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체계가 인문사회 기반 연구책임자들의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제약하며, 이로 인해 인문사회 연구가 구조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정근하, 2021). 더 나

아가, 인문사회과학 연구지원의 현실적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예산 제약과 평가 체계의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손호철 외, 2012). 특히 단일화된 평가 기준과 과학기술 중심의 사업 설계가 인문사회 연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구조적 문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는 단일체계 내에서 조직과 예산지원 체계의 비대칭성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며, 이에 따라 조직 구성의 차이도 나고 있다. 정부 R&D 예산에서 인문사회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투자 증가율도 연평균 1.3% 수준으로 전체 평균 8.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차이는 지원조직체계의 차이로 이어진다. 과학기술분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협력을 하는 기관들이 많은 반면, 인문사회 분야는 그러한 조직이 없어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인문사회과학적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통합체계 하에서 인문사회분야가 구조적으로 주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 연구지원체계 개편 모형 분석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지원체계의 개편을 논의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 정도의 모델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은 과거와 같이 별도의 전담지원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는 2009년 이전의 체계와 유사하게 운영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이원화된 내부 조직체계, 즉 재단 내 부서를 분리하는 방안이다. 앞서 전문가 조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의 전면 분리는 다소 급진적인 면이 있으므로 점진적 개선의 방안으로서 현재 한국연구재단 내에 분리된 본부를 두는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담 위원회와 이사회와 같은 기능적 분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각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강성호, 2021; 한국연구재단, 2024).

[표 17] 연구재단 개편 논의 종합

방안	설계 구조	장점	단점
전담지원기관 설립 (별도 재단 신설)	-인문사회분야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연구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예산·정책·평가·사업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 -미국 NEH, 영국 AHRC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인문사회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과 평가체계, 예산 배분 구조를 구축	-인문사회 특성에 맞는 정책 설계와 자율적 운영 가능 -이공계중심의 평가와 행정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예산,평가, 사업기획 등에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정부조직법, 예산법 등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예산·인력의 규모가 작아 조직의 지속가능성·정책영향력 약화 우려 -행정비용의 증가, 조직저항, 예산배정에서 불리해질 가능성 -융합연구가 약화될 가능성 존재
내부 조직 분리	-기존 한국연구재단 내에 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를 완전히 분리된 본부로 운영 -예산·평가·사업기획·인사 등 핵심 기능을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법인은 하나로 유지	-법적·행정적 부담이 적고, 기존 조직의 안정성 유지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정책 평가체계 구축가능 -융합연구 등 협력사업은 통합적으로 운영가능	-실질적 자율성의 확보가 쉽지 않음 (예산, 인사, 평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될 수 있음) -형식적 분리에 그칠 위험 -정책 일관성의 저하 위험 및 거버넌스 복잡성의 증가
기능 분리 (전담위원회 등)	-연구비 배분, 사업기획, 성과평가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인문사회분야 전담위원회나 이사회에 위임 -실질적 자율성은 확보하되, 조직·법인·행정은 통합상태를 유지	-분야별 자율성·책임성의 강화 -행정적 효율성과 정책일관성의 유지 -융합연구 등 협력사업 추진 용이	- 실질적 권한 분산이 미흡할 경우, 상징적·형식적 분리에 그칠 수 있음 - 예산·인사 등 핵심권한이 중앙에 남아 있으면 효과의 제한 - 정책결정과정의 복잡성의 증가

자료: 선행연구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기능분리-내부조직 분리-별도 조직 분리의 순서대로 실제 시행하기 어려움이 더 크다. 반면 역시 같은 순서대로 실제 분리에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모형들을 실행하기 어려운 원인들에게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라. 연구재단 분리 장애 요인 검토

연구재단의 분리 논의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데에는 구조적, 제도적, 자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로, 조직의 구조적 관성과 경로의 존성(path dependence)을 들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통합 이후 15년 이상 단일 체제로 운영되며, 600여 명의 인력과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관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한국연구재단, 2024). 이 과정에서 연구비 관리 시스템, 표준화된 평가 매뉴얼, 예산 배분 절차 등 다양한 조직적 루틴과 규범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었지만, 동시에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관성으로 작용한다.

조직생태학 이론이 지적하듯이(Hannan & Freeman, 1984), 조직은 생존을 위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구조를 재생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이미 제도적 성공 경험—예컨대 연구논문 수의 증가, 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이 ‘현재의 구조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내부 논리를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지원체계나 분리 구조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조직 정체성과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고비용의 전환 과정이 된다. 대규모 공공기관의 루틴과 역량(capabilities)은 한번 정착되면 이를 해체하는 데 강한 내부 저항이 수반된다. 결과적으로 연구재단의 분리나 기능적 이원화는 제도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시도로 인식되어,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둘째, 제도적 정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의 결여와 외부 압력의 존재를 들 수 있다. 한국의 국가 R&D 거버넌스는 오랫동안 ‘통합된 연구개발 관리체계’라는 제도적 신념에 기반해왔다. 정부는 효율성과 융합 연구를 강조하며, 모든 연구 분야를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간주해왔다. 특히 ‘융합과 협력’이라는 국가적 화두는 연구 영역 간 분리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로 비취지게 만든다. 제도적 동형화 이론이 설명하듯(DiMaggio & Powell, 1983), 조직은 효율성보다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의 규범적 압력에 순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인문사회 연구를 별도로 담당할 법적 기반이 미비한 점 역시 이러한 정당성 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인문사회연구 전담기구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독립기관 설립이나 재단 내부의 기능적 분리를 추진할 경우, 법적 정당성 부족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제도화된 국가 연구관리 체계(field) 전체가 통합 유지 논리에 맞추어 재조정되는 상황에서, 분리 논의는 이론적 당위로 제기되더라도 실제 제도 설계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셋째, 자원의존(resource dependence)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도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의 권력과 자율성이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Salancik & Pfeffer, 1978). 과학기술 분야는 다수의 부처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며,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인문사회 분야는 주로 교육부 및 연구재단에 의존하며, 대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문사회 분야는 예산 결정 과정에서 협상력이 낮고, 독립기관 설립 시 오히려 자원 배분의 축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독립이 자율

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연구자 사회 내부에서도 분리 논의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분리 문제는 단순히 행정 구조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경로의존성, 제도적 정당성의 제약, 그리고 자원 의존 구조가 맞물린 복합적인 제도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론적 당위성만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관성과 권력 구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리 논의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리의 당위성과 관계없이 조직 분리에서의 문제점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박천오(2011)에서 지적하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조직의 통합이 정책의 효율성 향상이나 정책 산출물의 질적 성장에 기여해서 실행된다기 보다는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현실적 여건에 맞추어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조직의 분리도 마찬가지이다. 조직 분리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다음 장부터 개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 V. 인문사회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 제도개선 방안 요약

본 장에서 제시되는 제도개선 방안을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8] 제도개선 방안 요약

구분		내용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내 인문사회과학분야 지원조직 개편</li> <li>- 교육부 인재정책실 학술연구지원과를 학술연구정책관 (국장급)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의대정원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의대교육지원관을 축소 내지는 폐지하고 이를 학술연구정책관으로 대체할 수 있음</li> <li>- 학술연구정책관 산하에 학술연구기획과, 학술연구지원과, 인문사회연구기관지원과를 설치함</li> <li>- 학술연구지원과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기반 확충과 관련된 업무를 연구재단과 협력하여 수행함</li> <li>- 인문사회연구기관 지원과는 인문학 관련 연구 편찬기관의 운영지원 등을 담당하여 인문사회연구지원체계를 일관성있게 관리함</li> </ul>
중·장 기적 제도 개선 방안	제도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재단을 분리해 한국학술진흥원 (가칭)의 설립</li> <li>- 총리 직속의 융합탐색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계간의 융합연구 기획</li> <li>- 인문사회분야의 정책연구 기획 및 평가를 전담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기획평가원 설치</li> </ul>
	법령 제·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학술진흥원 설립을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안</li> <li>- 학술진흥법 개정안에 인문사회과학기획평가원에 대한 조항도 추가함</li> <li>- 융합탐색위원회 설치를 위해 인문사회과학분야와 과학기술분야간 융합촉진법 제정안</li> </ul>

## 2.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 가. 문제제기: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위기

#### (1) 당면한 위협과 오래된 실패

##### (가) 당면한 위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연구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의 학문 생태계는 응용학문 중심으로의 편중과 기초학문에 대한 소외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취업 우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되는’ 실용적이고 응용적인 학문 분야로 몰리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문사회 등 기초학문 분야는 외면받고 있다. 대학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교육과 연구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충원율 등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지표 중심의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의 학술적 성과나 학문적 깊이에 대한 관심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학술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후속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학원 진학을 통해 연구자의 길을 걷는 학생이 감소하는 반면, 경력 개발이나 사회적 지위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직장인 학생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 중심의 대학원 교육이 약화되고, 학문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도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관련 규제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

면서,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강의 기회를 줄이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면서, 대학들은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으로 편법 채용하는 등 전임교원의 개념이 점차 이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의 권위는 약화되고, 교육과 연구보다 재정 확보나 사업 수주 등의 행정적 업무가 교수의 주요 역할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래 [표 19]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라는 평가 지표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교수 직책 명칭이다.

[표 19] 교수 명칭의 다양성

교수 명칭	내용
연구교수	일반적으로 비전임교원에 해당하나 특별한 경우 전임으로 임용하기도 함
산학협력중점교수 (산단교수)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이기도 하고 비전임교원이기도 함
강의전담교수	일부 대학에서는 전임교원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대개 비전임교원임
석좌교수	특별한 재원에 의해 임용된 교수로 운영방식에 따라 전임석좌교수, 초빙석좌교수, 명예석좌교수 등이 있음
초빙교수 초청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특임교수 겸임교수
	일반적으로 비전임에 해당하나 특별한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음

특히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의 경우, 교수들은 본연의 연구와 교육보다 학생 모집과 재정 기여를 위한 외부 사업 수행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사회과학계 대학원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연구보다는 네트워킹이나

사회적 영향력 행사에 초점을 맞춘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로 고위 공직자, 기업 임원, 지역 재력가, 정치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대학원에 등록하면서, 학문적 깊이와 연구윤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취업 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대학의 평가제도, 규제의 역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학문 생태계는 기초학문의 약화, 연구자의 단절, 교육의 본질 훼손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낮은 대학원 진학률로 인해 대학에서의 연구 추진의 어려움, 낮은 취업률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인문사회과학분야는 학문후속세대의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오래된 실패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재설정해 민간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하는 것을 국정 기조로, 정부 규모를 줄이는 작업을 착수하였다. 그 일환으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은 국정 기조의 변화를 수반한 정권 교체기 정치적 변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조직개편을 주도했던 인수위는 "융합의 시대 흐름에 맞춰 각 부처에 흩어진 비슷한 기능들을 한데 묶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를 구현하고자 했으며, 교육부가 가진 대학 업무와 과학기술부의 R&D 정책을 융합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통합하여 교육과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통합이 많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의 명분은 교육과 과학기술 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 내부에서는 교육 중심의 현안에 집중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적 과제가 소외되었다고 평가된다(동아일보, 2010).

둘째, 조직문화·정책철학의 차이가 컸다고 볼 수 있다(홍길표, 2009). 교육부 출신 관료·교육 정책 중심 사고와, 과학기술부 출신 인사·기술혁신 중심 사고가 충돌을 일으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연구개발(R&D) 정책의 일관성 및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이삼열, 2021). 교육 및 기초학술 지원에 전문성을 키워 온 관료가 국가 연구개발을 다루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겨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관점에서 보면, 초중등교육과 국가 R&D 간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인문사회과학이 더더욱 소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했던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고교 다양화 등 각종 중등교육정책으로 대학과 인문사회분야의 중요한 현안은 더욱 매몰될 수 밖에 없었으며,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설계를 위한 기회는 거버넌스의 실패로 실기했다고 볼 수 있다.

## (2) 대안의 상황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학의 혁신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한국의 학문 구조는 더욱 불균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대학 구조개혁과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은 의도와 달리 인기 학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기초학문과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더욱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생존 경쟁은 이러한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대학들은 학생 유치에 유리한 응용과학 및 실용 중심 학과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결과, 취업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인문사회과학 관련 학과들은 폐지되거나 통폐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대학 생존 전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학문적 다양성과 국가 연구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지원제도의 구조적 편중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연구비는 여전히 이공계 중심의 연구개발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인문사회 분야의 주요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BK21, SSK, HK 사업 등도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거점 국립대학 중심으로만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대학이나 중소 규모 대학들은 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정책적 구조는 학문 생태계 전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대학 개혁 정책이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단기적 성과 중심의 제도 운영과 수도권·이공계 중심의 연구지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지속적인 위축과 구조적 소외에 직면하고 있다.

[표 20] BK21 4단계 사업 중 인문학 및 사회과학분야 지역분포 현황

단	참여단(팀)	
BK21 4단계 인문학(단)	(수도권) 서울대 1개, 성균관대 3개, 고려대 2개, 연세대 1개, 이화여대 1개  (지방) 경북대 4개, 부산대 1개, 전남대 1개	수도권 8개 지방 6개
BK21 4단계 사회과학 (단)	(수도권) 서울대 8개, 연세대 5개, 성균관대 3개, 고려대 4개, 한양대 1개, 이화여대 1개, 서강대 1개, 경희대 1개, 중앙대 1개  (지방) 동서대 1개, 인제대 1개, 경북대 2개, 부산대 5개, 전남대 1개, 한국과학기술원 1개, 연세대 미래캠퍼스 1개, 전북대 3개, 충남대 2개, 충북대 1개,	수도권 25개 지방 18개
SSK사업	(수도권) 숙명여대 1개, 서울대 4개, 성균관대 2개, 중앙대 1개, 이화여대 2개, 동국대 1개, 아주대 2개, 연세대 4개, 서강대 2개, 국민대 1개, 고려대 3개, 한신대 1개, 한국외대 1개  (지방) 대구대 1개, 동아대 2개, 전남대 1개, 울산과기원 1개, 부산대 2개, 전북대 3개, 충북대 1개, 포항공대 1개, 한국과기원 1개, 부경대 1개, 춘천교대 1개, 대전대 1개	수도권 25개 지방 16개
HK사업	(수도권) 서울대 5개, 고려대 3개, 연세대 3개, 이화여대 2개, 서울시립대 1개, 한양대 2개, 건국대 1개, 동국대 1개, 국민대 1개, 한국외대 3개, 인천대 1개, 성공회대 1개, 인하대 1개, 명지대 1개, 서강대 1개, 경희대 1개  (지방) 부산대 2개, 한림대 2개, 전남대 1개, 해양대 1개, 목포대 1개, 원광대 1개, 부산외대 3개, 금강대 1개, 강원대 1개, 순천대/경상대 1개	수도권 28개 지방 15개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두뇌한국21 4단계 지원사업(<https://bk21four.nrf.re.kr>), 인문한국지원사업(<https://hk.nrf.re.kr>),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https://sskn.kr>)의 누리집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한편,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지원체계는 2019년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전면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구조적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강성호, 2025). 정부는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사업의 유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 간 유사성과 중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지원 제도로는 BK21 사업, SSK 사업, HK 사업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개인, 공동, 집단 단위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교육부의 연구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개인연구군에는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우수학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연구군에는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과 학제간 연구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 간 협력과 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사회적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길 위의 인문학’,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인생나눔교실’, ‘지혜학교’, ‘독서문화캠프’, ‘독서경영 인증 운영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간의 유사성, 기관 간 조정 부족, 성과관리 체계의 미비로 인해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체계는 여전히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사업의 평가제도 역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평가가 단기적인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의 질적 가치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계량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연구의 내용적 깊이나 사회·문화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체계가 부족하다. 둘째, 학문공동체 내부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논의가 미흡하여 제도적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셋째,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연구공동체의 좁은 특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회피제도의 미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과

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의 본질적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연구문화 전반에는 ‘성실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가 실패할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성과 미달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과적으로 연구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제한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특히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며, 논문 게재 편수 등 계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형식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질적인 연구 성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의 질적 발전이나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결국,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체계는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 성과 중심의 평가, 성실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연구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구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연구지원체계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지속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한 기초학술진흥 전략을 추진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학문 발전을 위한 전략기구로서의 추진체계가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학술 연구의 방향성과 정책 일관성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의 학술진흥체계는 1970년대 제정된 「학술진흥법」(1979년 제3205호)을 모태로 하고 있다. 당시 이 법의 취지는 “학문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촉진”을 명시함으로써,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학문 전반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취지는 선진국의 학술정책이 지향하던 기초학술의 ‘다양성(diversity)’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학문 생태계의 폭넓은 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시도였다(한국학술진흥재단, 2005; 권향원·김진선,

2021).

1970년대 당시에는 이러한 원리를 실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학술진흥국’이 설치되어, 정책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형태로 운영되었다. 즉, 기초학문 육성과 연구지원의 전략적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존재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학술진흥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소위 1970년 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권향원 외, 2021).

- (1) ‘학술진흥법’(1979)의 취지는 “학문분야의 균형있는 발전 및 촉진”을 목적으로 하였음 (1979.12.28. 제3205호) → 즉, 선진국의 접근에 부합하는 기초학술의 ‘다양성’(diversity)을 원리로 하였음
- (2) 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여러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표성이 있는 외부학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기구를 운영하였음
- (3) 교육부는 ‘국’ 단위 기구로 강화된 정책기능(기획)을 탑재하였으며, 특히 재단의 정책연구를 지향하였음 (ex. ’80년대 학술진흥정책연구(1981.12.) 보고서발간)

즉, 학술진흥의 기본 원리를 다양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현재의 과학기술 R&D와 기초학술분야는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관리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통합은 재원의 안정화, 정보의 체계적 관리, 연구결과의 평가, 활용체계의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1970년대 체제의 기본원리가 지향하였던 가치와 대비하여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권향원·김진선, 2021).

- (1) 기초학술진흥과 과학기술R&D는 획일화 된 기준을 바탕으로 관리(기획, 평가 등)하기 어려운 독자성을 지님(가령, 기초학술은 논의와 접근의 다양성(diversity)을 원천으로 학문생태계 관리를 추구하는 반면, R&D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량동원을 추구함)
- (2) 재원을 한 바구니(재단)에 담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R&D영역으로의 배분편중이 나타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실제 예산 편차로 형평성 파괴가 확인됨)
- (3) 교육부 내 '1개 과'의 소수 인원이 국가전략의 중핵인 기초학술진흥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70년대 체제와 현 체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 21] 원체제와 현재제 비교

원체제('70년 체제)	현재제
<p>• 국가발전 및 선진화의 기치에서 기초학술진흥의 필요성이 오히려 체감되었던 1970년대에는 교육부 내에서 “국”(학술진흥국) 단위로 정책권한과 기능이 강화 된 형태로 운영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학술진흥법’(1979)의 취지는 “학문분야의 균형있는 발전 및 촉진”을 목적으로 하였음 (1979.12.28. 제3205호) → 즉, 선진국의 접근에 부합하는 기초학술의 ‘다양성’(diversity)을 원리로 하였음</li> <li>• (2)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여러사업을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표성이 있는 외부학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기구를 운영하였음</li> <li>• (3)교육부는 ‘국’ 단위 기구로 강화된 정책기능(기획)을 탑재하였으며, 특히 재단의 정책연구를 지향하였음 (ex. ’80년대 학술진흥정책연구(1981.12.) 보고서발간)</li> </ul>	<p>• 현재 과학기술R&amp;D와 기초학술분야는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관리되고있음 (이러한 통합은 재원 안정화, 정보의 체계적 관리, 연구결과의 평가, 활용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기초학술진흥과 과학기술R&amp;D는 획일화 된 기준을 바탕으로 관리(기획, 평가 등)하기 어려운 독자성을 지님</li> <li>• (가령, 기초학술은 논의와 접근의 다양성(diversity)을 원천으로 학문생태계 관리를 추구하는 반면, R&amp;D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량동원을 추구함)</li> <li>• (2)재원을 한 바구니(재단)에 담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R&amp;D영역으로의 배분편중이 나타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실제 예산 편차로 형평성 파괴가 확인됨)</li> <li>• (3)교육부 내 ‘1개 과’의 소수 인원이 국가전략의 중핵인 기초학술진흥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li> </ul>

자료: 권향원·김진선, 2021

## 나. 개선방안

### (1) 거버넌스의 현황

교육부의 인문사회과학분야 지원조직은 인재정책실 학술연구정책과로, 학술연구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 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 지원 관련 규정으로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이 있는데, “전문기관”에게 학술연구지원사업 기획·평가·협약·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학술연구정책과의 업무 중 인문사회분야 지원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연구지원 정책 기획 및 실행을 들 수 있다. 교육부는 매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금년에는 인문사회 분야에 약 4,191억 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인문사회 연구소지원사업, 인문학대중화사업 등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2025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순수학문형 등 3개 유형)』 신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평가·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및 학술생태계 활성화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여러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사용기준, 연구성과 관리 등을 위한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학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설, 국제융합연구 연합체(컨소시엄)형 추가, 후속사업(HK 3.0) 신설 등을 포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제도적 기반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부 기능을 가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는 총 11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제규칙 상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표 22]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업무분장

1.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등 학술단체의 육성·지원
3.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및 대학연구인력의 국제 공동연구 및 교류 지원
5. 대학 연구활동의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의 조사·분석
6.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진흥, 학문후속세대 양성, 융복합 연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인문학 대중화 및 인문학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추진
8. 인문사회·이공 분야 대학 연구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연도별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0.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초교양교육 강화 사업의 수립·시행
13. 기초학문자료센터의 구축·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후관리·분석
14.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5.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16.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운영 지도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지원
17. 연구윤리의 확립·확산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8. 한국학 진흥 정책·사업의 기획·추진
19. 글로벌 석·박사 양성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0.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2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 지원

자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인제정책실, 제10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전담하는 조직은 ‘인문사회연구본부’이다. 이 본부는 인문사회 연구의 기획, 지원, 평가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부서로서, 인문학단, 사회과학단, 문화융복합단, 인문사회연구총괄실, 인문사회연구지원실로 구성되어 있다. 인문사회연구총괄실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정책 방향과 주요 연구사업의 기획·조정을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인문사회연구총괄팀’을 두고 있다. 이 팀은 인문사회연구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지원사업 간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인문사회연구지원실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과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문사회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 인프라 구축과 사업운동을 지원하며,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은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비 지원, 과제관리, 성과 확산 등을 담당한다.

[표 23]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실 조직별 업무분장

하부조직	업무분장
인문학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학, 문학, 역사, 철학, 종교학 등 소관분야 연구동향 파악 및 연구지원 현황 조사와 분석(성과관리 포함)</li> <li>○ 소관분야 사업기본계획 기획, 평가지표 개발 등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li> <li>○ 소관분야 관련 정책과제 수립 및 관리·참여</li> <li>○ 소관분야 연구지원 관련 연례보고서 작성 등</li> <li>○ 소관분야 심사평가 관련 사항(심사세부계획수립, 패널분류, 심사자 구성 및 심사 등)</li> <li>○ 인문한국(HK)지원사업 및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의 심사평가 계획 수립</li> <li>○ 소관 분야 전문위원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소관분야 심사자 풀 관리와 운영\</li> <li>○ 기타 소관분야 관련 내·외부 요청사항 등</li> <li>○ 인문사회연구본부 학문단 총괄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li> <li>○ 총괄부서 등의 업무 요청 협조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전략연구본부와 연계된 사업 관련 업무 요청 협조에 관한 사항</li> </ul>
사회 과학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교육학, 사회학, 언론학, 사회복지학 등 소관분야 연구동향 파악 및 연구지원 현황 조사와 분석(성과관리 포함)</li> <li>○ 소관분야 사업기본계획 기획, 평가지표 개발 등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li> <li>○ 소관분야 관련 정책과제 수립 및 관리·참여</li> <li>○ 소관분야 연구지원 관련 연례보고서 작성 등</li> <li>○ 소관분야 심사평가 관련 사항(심사세부계획수립, 패널분류, 심사자 구성 및 심사 등)</li> <li>○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의 심사평가 계획 수립</li> <li>○ 소관분야 전문위원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소관분야 심사자 풀 관리와 운영</li> <li>○ 기타 소관분야 관련 내·외부 요청사항 등</li> <li>○ 총괄부서 등의 업무 요청 협조에 관한 사항</li> <li>○ 국가전략연구본부와 연계된 사업 관련 업무 요청 협조에 관한 사항</li> </ul>
문화 융합 복합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과학, 생활과학, 예술학, 체육학, 문헌정보학, 여성학, 융복합, 학제간 등 소관분야 연구동향 파악 및 연구지원 현황 조사와 분석(성과관리 포함)</li> <li>○ 소관분야 사업기본계획 기획, 평가지표 개발 등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li> <li>○ 소관분야 관련 정책과제 수립 및 관리·참여</li> <li>○ 소관분야 연구지원 관련 연례보고서 작성 등</li> <li>○ 소관분야 심사평가 관련 사항(심사세부계획수립, 패널분류, 심사자 구성 및 심사 등)</li> <li>○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의 심사평가 계획 수립</li> <li>○ 소관분야 전문위원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소관분야 심사자 풀 관리와 운영</li> <li>○ 기타 소관분야 관련 내·외부 요청사항 등</li> <li>○ 총괄부서 등의 업무 요청 협조에 관한 사항</li> <li>○ 국가전략연구본부와 연계된 사업 관련 업무 요청 협조에 관한 사항</li> </ul>
(인문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 종합계획(세부추진계획 포함) 수립 지원 총괄</li> <li>○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등 기획에 관한 사항</li> </ul>

<p>연구 총괄 실)</p> <p>인문 사회 연구 총괄 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의 지원통계실적, 성과관리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li> <li>○ 사업관련 대내외업무 총괄 및 조정</li> <li>○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 법령 및 규정 관련 사항</li> <li>○ 인문사회연구본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 및 관리</li> <li>○ 인문사회연구본부 (책임)전문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인문사회연구본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업추진 관련 공통 사항</li> <li>○ 상기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한 PM의 검토, 자문, 협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본부 내 PM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일반)[인문사회연구분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 종합계획(세부추진계획 포함) 수립 지원</li> <li>○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 사업설명회 추진 지원</li> <li>○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li> <li>- 인문학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li> <li>-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li> <li>- 인문학 진흥 관련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li> <li>- 인문학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li> <li>-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li> </ul> </li> <li>○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시, 인문주간, 세계인문학포럼, 한중인문학포럼, 성과홍보 및 확산)</li> <li>○ 기타 사업과 관련되는 내·외부 요청사항 등</li> <li>○ 기초학문자료센터(KRM)에 관한 사항</li> <li>○ 소관사업 관련 제재처분평가단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li> <li>○ 기관 총괄부서 등의 업무 요청에 대한 본부 총괄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li> <li>○ 국가전략연구본부와 연계된 사업 관련 업무 요청 협조에 관한 사항</li> </ul>
<p>(인문 사회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 종합계획(세부추진계획 포함) 수립 지원</li> <li>○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 사업설명회 추진 총괄</li> <li>○ 아래 사업의 세부시행계획수립, 공고, 접수, 예산집행 및 선정</li> </ul>

<p>지원 실)</p> <p>인문 사회 연구 소지 원팀</p>	<p>통보, 협약체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사업의 사후관리(연구계획변경처리, 보고서접수, 결과평가 등)</li> <li>○ 아래 사업의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li> <li>○ 기타 사업과 관련되는 내·외부 요청사항 등</li> <li>○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대학중점/정책중점연구소),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신흥지역연구지원</li> <li>○ 인문학진흥사업: 인문한국(HK)지원사업,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li> <li>○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li> <li>○ 상기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한 PM의 검토, 자문, 협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소관사업 세부 평가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소관사업 관련 제재처분평가단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li> <li>○ 총괄부서 등의 업무 요청 협조에 관한 사항</li> <li>○ 국가전략연구본부와 연계된 사업 관련 업무 요청 협조에 관한 사항</li> </ul>
<p>(인문 사회 연구 지원 실)</p> <p>인문 사회 연구 자지 원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 종합계획(세부추진계획 포함) 수립 지원</li> <li>○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 사업설명회 추진 지원</li> <li>○ 아래 사업의 세부시행계획수립, 공고, 접수, 예산집행 및 선정 통보, 협약체결 등</li> <li>○ 아래 사업의 사후관리(연구계획변경처리, 보고서접수, 결과평가 등)</li> <li>○ 아래 사업의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li> <li>○ 기타 사업과 관련되는 내·외부 요청사항 등</li> <li>○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공동연구지원사업, 우수학자지원사업, 명저번역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li> </ul> </li> <li>○ 폐지 및 종료사업 관리</li> <li>○ 상기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한 PM의 검토, 자문, 협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소관사업 세부 평가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소관사업 관련 제재처분평가단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li> </ul>

- 총괄부서 등의 업무 요청 협조에 관한 사항
- 국가전략연구본부와 연계된 사업 관련 업무 요청 협조에 관한 사항

출처: <http://www.nrf.re.kr>

## (2) 제도적 개선방안

현 체제인 한국연구재단 중심의 조직통합 및 통합관리는 통합을 통해 기초학술과 과학기술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권향원·김진선, 2021: 52). 이러한 접근은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학문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연구 분야에서 경계하는 “구조결정론(structural determinism)”의 한 형태로 지적된다(Sommer & Gamper, 2021). 즉, 조직의 구조를 단순히 통합한다고 해서 기능적 조화나 성과 향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권향원·김진선,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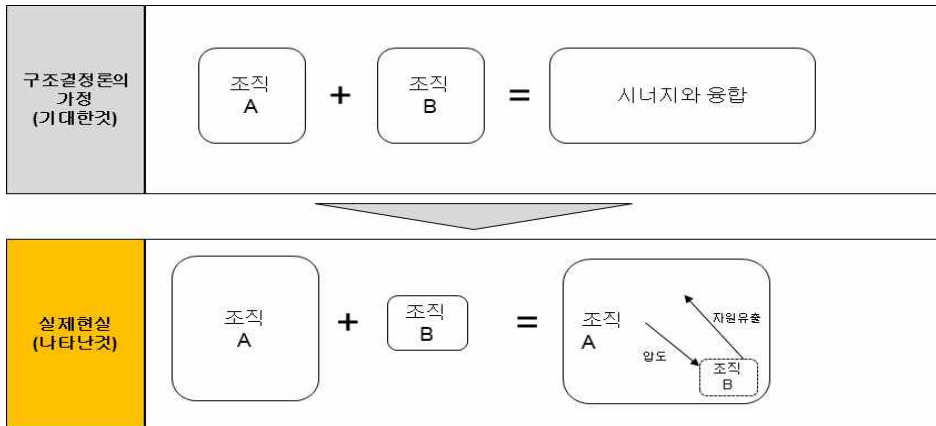
첫째, 통합되는 조직들이 동일한 규모와 권한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을 압도하는 비대칭적 권력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원의 불균형한 이동이 일어나 한쪽 조직의 인력이나 예산이 다른 쪽으로 흡수되거나, 통합된 체제 내에서 특정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로 인해 한 조직의 역량이 약화되거나, 주요 기능이 부수적 역할로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복수의 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형식적·구조적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사업 목적, 추진 논리, 조직문화, 업무 방식, 성과 평가체계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의 통합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내적 이질성으로 인해 통합 이후에도 조직 간의 긴장, 비협력적 관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정부에서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이 실패로 결론지어진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조직 간의 유기적 결합이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결국, 단순한 조직 통합만으로는 기초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통합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결합을 넘어, 각 조직의 정체성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협력적 운영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제도적·문화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렌즈를 통해 현실을 해석할 때,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있는 구조는 비대칭적인 조직공존의 양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학기술을 중시하게 된 2000년대 이후의 정책기조로 인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예산 배분에 비대칭성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상황의 누적으로 인해 현재의 비대칭성이 점증된 상태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성은 학술진흥의 원류이자 기본원리인 다양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림 8] 구조결정론이 가정한 것과 실제현실의 차이 (개념도)



자료: 권향원·김진선, 2021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 우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학술진흥법을 살펴본다. 양자는 서로 다른 법 목적과 논리를 가지고 있으나, 양자는 모두 고유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24] 법리상의 비교

학술진흥법 제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조
<p>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b>학문의 균형적인 발전</b>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학문의 다양성(균형발전)</b></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b>추진 체계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b>으로써 국가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추진체계 혁신과 연구환경 개선</b></p>

자료: 권향원·김진선, 2021

‘학술진흥법’은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과 다양성 제고를 그 기본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가치 지향은 학문의 발전을 단순한 성과 중심의 진전이 아니라, 학문 간의 균형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가개발혁신법’은 학문의 발전을 추진체계의 혁신과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연구환경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 두 법률이 내포한 법논리는 각각 고유하고 타당한 목적과 철학을 지니며, 공공성의 중요한 가치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술진흥법이 지향하는 학문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단일 부서(학술연구정책과)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최소한의 예산으로만 다루어지는 등 매우 제한된 자원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거버넌스 운영 개편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진흥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연구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의 지원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 교육부는 인재정책실 산하에 인재정책기획관을 두고, 그 소관으로 학술연구정책과를 설치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진흥정책 기획과 세부사업 추진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능상 과도한 업무 집중을 초래하고, 인문사회 연구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인재정책실 산하에 보조기구로 ‘학술연구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새로 설치되는 학술연구지원과는 특히 현재 학술연구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기초교양교육 강화사업, 학술자원관리, 연구윤리 확립, 한국학 진흥 등과 같은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기반 확충과 관련된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 인문학 관련 연구·편찬 기관의 운영지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운영지원 업무도 함께 담당함으로써, 인문사회 연구 지원체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연구지원과의 세부 업무는 다음 [표 24]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표 25] 교육부 학술연구지원과의 주요 업무 구성 방안

1. 기초교양교육 강화 사업의 수립·시행
2. 기초학문자료센터의 구축·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후관리·분석
3.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5.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운영 지도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지원
6. 연구윤리의 확립·확산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7. 한국학 진흥 정책·사업의 기획·추진
8. 글로벌 석·박사 양성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9.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1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 지원

단기적 처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현행 교육부 조직체계로는 인문사회분야의 진흥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현재 인재정책실은 인재정책기획관 산하에 인재양성정책과, 인재양성지원과, 인재선발제도과, 대학규제혁신추진단을 두고 있으나, 인재양성 및 선발 관련 기능과 학술연구진흥 기능은 그 성격이 상이하다. 따라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진흥을 총괄하는 ‘학술연구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하여 별도의 정책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술연구정책과의 업무분장과 기초학술 진흥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장급 기관으로 설치·운영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의대교육지원관과 그 하부조직(의대교육지원과, 의대교육기반과)은 의대정원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 이후에는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전제로 교육부 내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해당 기

구들은 현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1년 연장 유예한 이후 학술연구정책관으로 대체하는 것 또한 전략적으로 선택해 고려할만 대안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의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정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연구정책관 산하에는 ‘학술연구기획과’, ‘학술연구지원과’, ‘인문사회연구기관지원과’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학술연구기획과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사업 기획, 예산 확보 등을 담당한다. 학술연구지원과는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한국연구재단과 협력하여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가외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인문사회연구기관지원과는 국사편찬위원회, 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연구재단 등 주요 연구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을 총괄 지원한다.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 인문사회 연구의 정책 기획과 실행이 분리·전문화되고, 정부-재단-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의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제시한 인재정책실 개편방향은 기구나 인력의 순증 없이 기능 재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안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직개편안은 기존 하부조직의 명칭·기능·업무량을 조정하여 같은 직급의 새로운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설기구 또는 신규인력의 평가대상<sup>17)</sup>이 되지 않

17)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2005, 32)에 의하면, “조직 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고 책임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제 개정으로 신설되는 하부조직 및 신규로 충원되는 인력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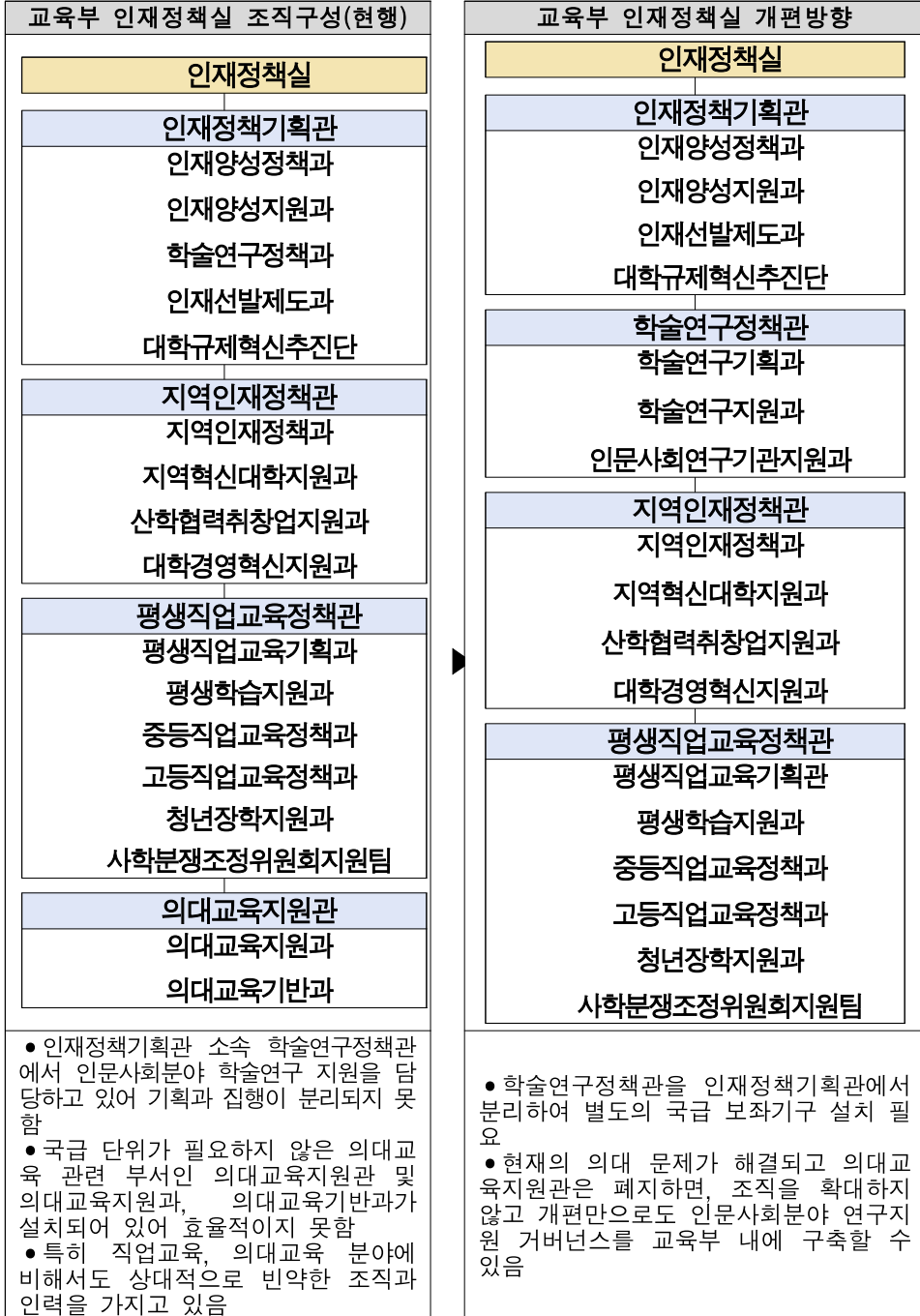
는다. 이로 인해 부처 입장에서도 조직개편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교육부 내부에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진할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개편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기초학술 진흥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과정은 충분히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교육부의 인재정책실 개편방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

과 등의 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설기구 또는 신규인력의 평가 대상이 되는 하부조직 또는 정원은 3년 범위에서 운영 이후, 해당기간이 만료 되기 전 그간의 업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심사회의를 거쳐 평가 제외, 평가기간 연장, 축소, 폐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9] 교육부 인재정책실 개편방향



### 3.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 가.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 개편

##### (1) 연구지원사업 개편

현재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지원사업으로는 BK21 사업, SSK 사업, HK사업 등이 있으며, 주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지역 간 지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BK21 4단계 사업의 경우 인문사회과학뿐 아니라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신산업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어, 인문사회과학 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지원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BK21사업 중 인문사회과학 관련 기능을 SSK 사업과 HK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등 유사한 연구지원 사업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BK21, SSK, HK사업과 내용이나 지원 대상 면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집행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 부문에서 추진 중인 중인 인문사회과학 분야 진흥사업을 분석하여, 지원 조직과 기능을 교육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분산된 지원을 정비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환경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전국 24개 대학 대학원을 대상으로 약 807억 원 규모의 ‘Global BK사업’

을 운영하고 있으나, 거점국립대학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지방 중소규모 대학의 참여와 수혜는 제한적이다.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대학 전반이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도전적 연구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며, 연구자가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성실실패’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연구평가단 풀(pool)을 확대하고, 논문 게재 편수 등 양적 지표보다는 대표성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실질적 학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지원사업 개편은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학문적 심화와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구 지원체계 전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2)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 촉진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현재의 사회문제 해결과 미래사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학문 및 연구지원체계는 오랫동안 ‘이공계 중심의 기술혁신’과 ‘인문사회 중심의 담론 연구’로 이원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Society Problem-Oriented Research)나 인간중심 기술혁신(Human-Centered Innovation)으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의 사회적 영향·윤리·법제적 통제가 새로운 국가 과제로 등장하였다. 기술개

발과 사회적 합의가 분리될 경우, 과학기술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한편, OECD, UNESCO 등은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혁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각각의 학문분야 지원만을 규율하며, 융합연구·융합인재·사회수용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개별법률을 개정하여 미시적인 문제에 대응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상호 연계·협력·조정을 위한 큰 틀에서의 제도설계와 법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법령은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혁신체계의 균형 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기술발전과 인류 복지 증진을 실현을 목적으로 인간 중심, 사회적 책임, 포용적 혁신의 원칙, 학문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원칙, 공공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연구 생태계 구축이라는 기본이념을 가진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는 5년마다 ‘인문사회과학·과학기술 융합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관하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도모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기 융합탐색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교육부·문체부 장관(부위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관련 정책의 심의·예산조정·평가 및 거점기관 지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대학, 출연연, 공공·민간 연구소 등 중에서 융합연구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융합연구센터·데이터 플랫폼·공동연구 인프라를 운영하며 사회문제 해결형 과제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근거 법률이 된다.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대학원, 공동학위, 융합교과과정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체·공공기관 연계형 현장교육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감수성을 지닌 과학기

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재정 및 세제지원을 위해 융합연구사업의 별도 예산편성, 민간 참여형 융합R&D에 대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 사회적 가치 창출형 과제에 대한 가점 부여 제도화 수행과 성과평가 및 환류의 근거가 된다. 특히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성과 사회적 파급력 분석 및 평가 결과를 차기 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이외에도 EU, OECD, 일본 등과 공동연구 및 인재교류와 관련 사업의 지원을 위한 근거가 된다.

#### 나. 지원체계 개선 방안

##### (1)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성

지금까지 드러난 인문사회과학 분야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개편은 크게 세 개의 골자로 이루어진다. 연구재단의 분리와 학술진흥재단(또는 학술진흥원)의 부활,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정책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산하에 융합탐색위원회를 설치 및 인문사회분야의 정책연구·기획 및 평가를 전담할 기구의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각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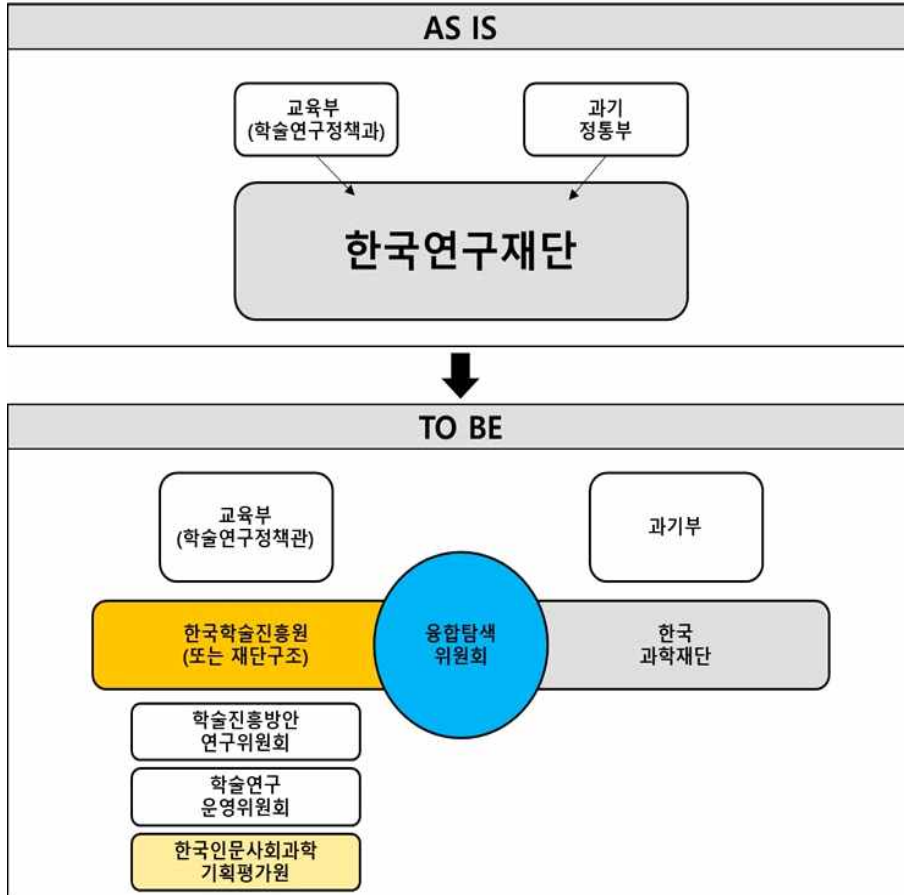
첫째, 연구재단의 분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에 따라 소외된 기초학술을 진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초학술의 소외로 인해 학문간 불균형,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실패,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본 안은 기초학술과 과학기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되, 양자를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진흥조직의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방향으로 한다.

둘째, 융합탐색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교육부의 기초학술기능과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능을 서로 분리하여, 소관법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하되

양자를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인문사회분야의 정책연구·기획 및 평가를 전담할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인문사회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치를 통해 인문사회분야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기관을 새로이 창설하는데 대한 비용을 고려해야하지만, 기획-집행-관리 및 평가의 구조를 세워 연구지원체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축한다면 필요한 기관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조직개편의 방향성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10] 조직 개편안의 방향성



자료: 권향원·김진선 (2021)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음

## (2) 한국연구재단의 분리와 한국학술진흥원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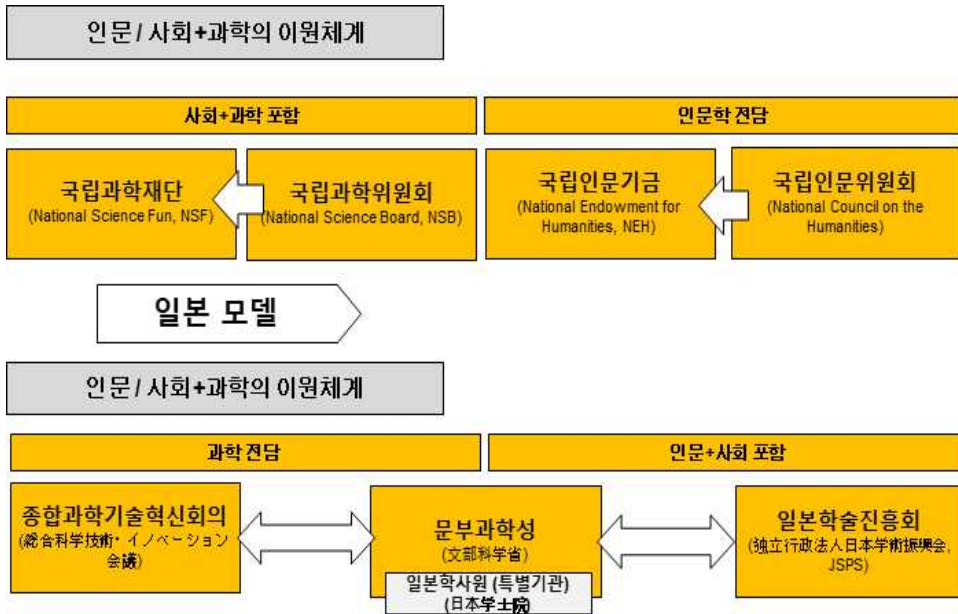
현재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학술 기능은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구조는 각 부처가 지닌 독자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연구재단 중심의 조직 통합 및 통합관리는 기초학술과 과학기술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플랫폼으로 통합 운영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예산 배분의 비대칭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술 진흥의 근본 원리이자 다양성(diversity)을 보장해야 하는 목표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직관리의 측면에서도 한국연구재단은 2개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협업조직의 특성 또한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다수 부처의 업무를 하나의 조직에서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 처리절차, 규모, 예산 및 상대하는 고객집단의 문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술진흥과 국가 R&D 지원 업무는 큰 틀에서 상당한 이질성이 있으며, 이는 조직을 분리할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과기부는 물리적으로 기능을 분할하여, 과거 1970년대 학술진흥재단(KRF)과 한국과학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원체제 구조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포스트휴먼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학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통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의기구, 예컨대 ‘융합탐색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조율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설정할 경우, 기초학술진흥을 전담할 독립적 추진체계로서 ‘한국학술진흥원(가칭)’ 또는 이에 준하는 재단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학술진흥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학문의 융합·통섭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일본과 미국의 학술진흥 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림 11] 미국과 일본 사례



자료: 권향원·김진선, 2021

특히 일본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과학분야를 전담하고, ‘일본학술진흥회’가 인문사회분야를 전담하는 이원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양자간의 다리를 놓는 체계로서 한국의 교육부+과기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2원체계 안을 따르는 경우, 일본 모델과의 유사성을 가지게 된다. 다만 교육부+과기부의 기능을 포괄하여 대부처주의로 가져가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교육부와 과기부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수행하고 있는 융합/통섭의 역할

을 별도의 기구를 두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 과기부, 인문사회기초학술계, 과학기술계가 서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 혹은 협의체/심의체를 두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향후 연구재단이 분리될 경우, 「한국연구재단법」은 폐지되고, 한국학술진흥원(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으로 분리되어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한국연구재단은 조직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별도의 법령을 가지고 있으나 전신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진흥법」에 별도의 장(제3장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법적 근거를 두었다. 한국학술진흥원(또는 재단)이 부활할 경우, 학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나을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절에서 제시하고 한국과학재단의 근거법령은 본 연구에서는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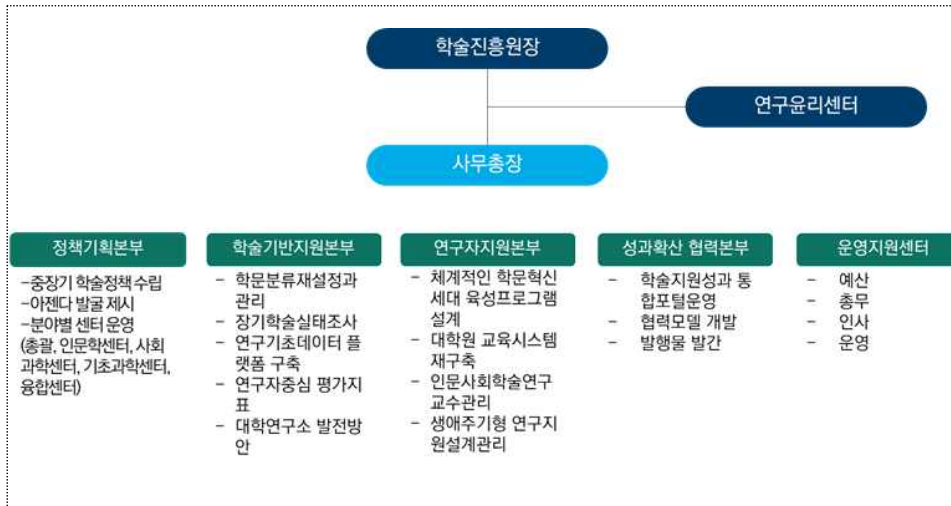
한국학술진흥원(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을 부활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적 규모는 2009년 폐지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09년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기 전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정원 146명 조직으로 운영된 바 있고(나진희, 2013). 조직 구성은 본부-팀 중심의 사업 및 기능별 조직체계로 운영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을 분리하여 원체제인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원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제안되었다. 특히 이강재(2019) 및 주상현(2021)이 제시하였는데, 두 안은 큰 틀 및 세부구성이 동일하다. 조직 구조를 개관하면 원장(또는 재단 이사장) 직속으로 연구윤리센터를 원장 밑에 사무총장을 두고, 정책기획본부, 학술기반지원본부, 연구자지원본부, 성과확산·협력본부 4개 본부와 운영지원센터를 둔다.

학술진흥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큰 틀에서 이강재(2019), 주상현(2021)안

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되 조직 수요에 따라 세부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2] 이강재(2019)·주상현(2021)의 학술진흥원 기본 설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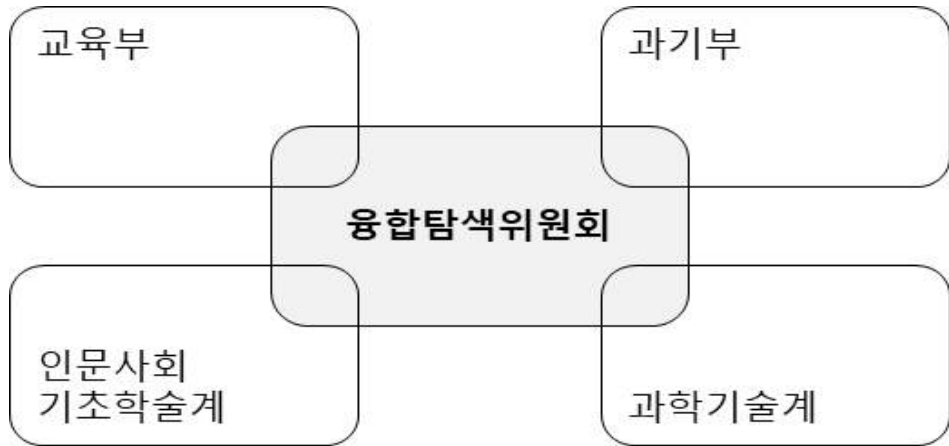
자료: 이강재, 2019; 주상현 외 2021

한편, 한국연구재단을 분리하여 새로운 조직을 설치할 경우, 일부 연구계의 반발 또한 예상 가능하다. 특히, 한국학술진흥원이 교육부 산하에 설치될 경우, 부처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부 학문분야의 연구자들로부터 조직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인문학과 사회과학계의 갈등, 문화예술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지원 문제로 인한 집단간 갈등의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 (3) 융합탐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상에서 논의한 부처간 협의체를 가칭 ‘융합탐색위원회’라고 칭할 경우, 융합탐색위원회는 다부처 협력과 학문 간 융합성을 전제로 하여, 정부·학계·전문기관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구성하고 인문사회과학의 정책기획 역량과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구성을 지향한다.

[그림 13] 가칭 융합탐색위원회의 구성



자료: 권향원·김진선, 2021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위원회는 다부처가 2개 부처가 참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총리 직속으로 설치한다.

둘째, 위원의 구성은 총 25인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셋째, 인문사회분야에서는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교육학, 문화예술정책 등 각 분야 대표 학자 6명을,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공학, ICT, 생명과학, 환경공학 등 각 분야 대표 학자 6명을 위촉한다.

넷째, 전문기관 및 민간에서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인문사회과학기획평가원<sup>18)</su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산업계 또는 시민사회 전문가 등 5명을 위촉하고, 간사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정책센터가 담당한다.

한편,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연 2회 정기총회 및 비정기총회를 통해 중장기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주요사업을 승인한다.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되 각 분과의 기능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미래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정책 기획 기능으로 국가 차원의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 전략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 중심 정책에서 소외된 인문사회적 관점을 통합, 인문사회 연구성과를 국가 혁신전략(R&D, AI, ESG 등)과 연계 등을 세부기능으로 하고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위해서는 10년 단위의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 비전 및 추진계획’ 수립, 부처 간 역할 분담, 예산 구조 및 협력체계 설계 등을 세부기능으로 한다.

둘째, 연구개발(R&D) 기능으로 융합형 R&D 기획 및 신규 사업 제안을 위한 사회적 난제(기후위기,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인문사회-기술 복합 연구 기획, 사업 평가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관점의 기술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체계 구축, 성과 공유를 위한 연례 심포지엄 및 백서 발간 등이 있다.

셋째, 거버넌스 및 조정 기능으로 부처 간 중복사업 조정을 위한 교육부 인문사회R&D와 과기정통부 기술R&D 간 협업 및 예산 조정, 정책 연계 및

18) 한국인문사회과학기획평가원의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법제도 개선 제안을 위한 인문사회 연구 관련 제도(연구비, 평가, 인력양성 등) 개선 권고 등을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제 협력을 위해 UNESCO, OECD, EU Horizon 프로그램 등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선진 사례 비교 및 국내 적용을 위한 사례연구 등이 있다.

융합탐색위원회 사무국은 50명에서 100명 내외의 조직으로 구성하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하고 자체 인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다만, 별도의 연구직 인력을 전문임기제(가급, 나급, 다급)로 채용하여 연구진흥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융합탐색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인문사회학이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 확립, 융합형 연구 생태계 조성 및 인문사회 연구의 공공가치 강화, 과학기술 중심의 평가·지원체계 개선 및 다부처 공동R&D의 정례화 및 기술혁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융합탐색위원회의 설치를 위해서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각 학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6년 내 위원회 설치를 위한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 간 융합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융합탐색위원회 설치를 위해 「인문사회과학분야와 과학기술분야 간 융합촉진법」(가칭)<sup>19)</sup>을 제정하고 하위 규정으로서 융합탐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

### 융합탐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제1조(목적)

19) 자세한 내용은 뒷 장에서 후술함

이 규정은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정책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설치·운영하는 융합탐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기본 계획 수립
2. 융합형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 예산 배분, 평가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부처 간 관련 사업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인문사회적 가치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평가 및 사회적 영향 분석(Social Impact Assessment)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6. 국제 협력 및 해외 융합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 ③ 공동부위원장은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이 합의하여 위촉한다.
2. 인문사회과학 분야 및 과학기술 분야의 학계 대표
  3.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4. 산업계, 시민사회 또는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인문사회-기술 융합분과
  2.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분과
  3. 미래가치 탐색분과
- ② 분과위원회는 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

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해당 분야에 관한 세부 검토를 수행한다.

####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준비 및 운영 지원
2. 융합연구 관련 과제 기획 및 자료 수집
3. 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및 성과관리
4.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사무국의 장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정책센터장이 겸임한다.

####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책 기획, 성과평가, 국제협력 등 특정 분야의 연구·분석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기획 및 평가 전담기구<sup>20)</sup>

## (가) 필요성

인문사회분야의 정책연구·기획 및 평가를 전담할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인문사회분야의 연구 진흥을 위해 정책 연구, 기획, 평가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가 부재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과 관련한 정책은 수립이 미흡하며,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배분이 사전에 적절히 평가되지 못함에 따라, 연구 수행을 위한 예산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인문사회분야 연구는 전체 R&D 예산 대비 충분한 근거 없이 배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기술 발전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기획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연구자들의 관심과 역량에 국한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학제간 연구나 융합 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성과 평가 측면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계량적 지표에 의존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대학이나 연구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출연(연) 기관의 평가 역시 상급기관에 따라

20)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두고 있다.

기준과 방식이 천차만별로 적용되어,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 (나) 조직의 구성과 운영

(가칭) 인문사회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조직체계를 준용하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특성에 맞게 기획·평가·정책조정·성과확산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능 중 과학기술분야 진흥을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 특히 연구기능을 인문사회과학분야에 맞게 적용한다. 기구는 교육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설치하되, 초기에는 운영 및 사업 인력 약 100명, 5년 이내 약 200명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한다. 기능별로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기획 기능에는 국가 인문사회과학 진흥 종합계획 수립 지원(5년 단위), 분야별 연구투자 로드맵 작성, 사회문제 기반의 정책연구 기획(예: 지역소멸, 고령화, 기후위기, 문화격차 등), 부처 간 연구사업 중복 조정 및 협력모델 설계 등이 세부기능으로 포함된다.

둘째, 사업평가 기능에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분석, 사업별 성과평가 및 예산 효율성 평가,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 조정 및 정책 환류 체계 구축, 평가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분석 기반 정책 제안 등이 포함된다.

셋째, 정책조정 및 거버넌스 구축 기능에는 부처 간 인문사회 연구사업의 연계·조정·조율, 국무총리 산하 융합탐색위원회(가칭) 지원, 지자체 및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넷째, 성과관리 및 확산 기능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정책·교육·문화 확산에 연계, 인문사회과학 정책성과 종합포털 운영, 국민 체감형 사회문제 해결 성과 발굴 및 홍보, 국제협력(UNESCO MOST, OECD STI 정책 협력 등) 강화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데이터 기반 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인문사회과학 데이터 플랫폼(K-HSS Data Hub)’ 구축, 정책·학술·사회지표의 통합 데이터 분석 체계 마련, AI 기반 정책기획·평가시스템 시범 도입 등이 기능으로 포함된다.

인문사회과학기획평가원의 설치를 통해 인문사회과학의 국가 전략적 위상 제고 및 과학기술정책과의 균형 확보, 근거 기반 정책기획(Evidence-based Policy Planning) 실현,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지원을 통한 국가 혁신역량 강화,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 및 중복투자 최소화, 연구 성과의 국민 체감형 확산 및 공공정책 적용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표 26] 인문사회과학기획평가원의 조직 구성

구분	주요 부서	주요 기능
원장		기획평가원의 관리 등
기획조정본부	정책기획실 예산조정실	인문사회과학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부처 간 예산·사업 조정, 국가R&D 투자 방향 제시
정책평가본부	사업평가실 정책분석실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정책 연구, 신흥사회문제 대응 연구기획
사회혁신연구본부	융합정책실 사회혁신기획실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정책 연구, 신흥사회문제 대응 연구기획
성과확산본부	성과홍보실 국제협력실	연구성과 확산, 국내외 학술·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파급효과 평가
경영관리본부	인사팀 재정팀 정보화팀	조직운영, 재정관리, 연구관리시스템(K-HSS-Eval) 구축

따라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 기획, 평가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유사하게 인문사회과학기획평가원(가칭)과 같은 조직을 통

해 실현될 수 있다. 이 기구는 기술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문학 분야의 수요를 예측하고, 인문사회분야의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연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을 분석하고, 응용과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 배정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연구예산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분야 내 세부분야 간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방안도 연구하여 예산 운용의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공학·응용과학 간의 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학제간 연구와 융합 연구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연구사업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기관 평가 업무를 신설 조직에서 전담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문사회 연구기관 간 협력과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학문 분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연구 활동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직을 싱크탱크 기능과 정책 기획 및 평가 기능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되기 전, 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로 출범했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 4. 법령 제·개정안

### 가. 한국학술진흥원 설립을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안

한국학술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근거 법령의 재정보다는 「학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개정안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연구재단으로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학술진흥법」 제3장 한국학술진흥재단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 제00장 한국학술진흥원

제00조 (한국학술진흥원의 설립) ①학술활동의 지원·육성과 학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00조 (설립등기) ①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 (정관) 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00조 (사업) ①진흥원은 제00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활동의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2. 연구장려금·연구장학금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

3.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의 보조

4. 학술에 관한 국내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5. 대학·학술단체 및 연구자의 학술활동을 위한 시설 및 편의 제공

6.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7. 학술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8. 학술진흥에 관련된 연구수행

9.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10. 학자금의 무상지급 및 대여

11. 기숙사 등 시설의 설치·운영

12. 기타 학술진흥 및 학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진흥원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조 (학자금의 대부 및 상환) ①제00조제00항제00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무상지급학자금·무이자대여학자금 및 이자부대여학자금으로 구분

하되,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기준·상환기한·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학자금 지급·대여의 방법, 그 대상자의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00조 (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진흥원은 학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자금의 상환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학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의 상환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학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제00조 (학자금계정) 진흥원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00조 (임원) ①진흥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조 (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00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감사는 진흥원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조 (이사회) ①진흥원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00조 (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00조 (출연금) ①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학자금지원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진흥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진흥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재산을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00조 (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조 (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해 2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 (검사 등) ①교육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진흥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조 (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00조의(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00조

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술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00조 (벌칙적용의 의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0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0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나. 「인문사회과학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간 융합 촉진법」(가칭) 제정안

인문사회과학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간 융합 촉진 및 융합탐색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인문사회과학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간 융합 촉진법」(가칭)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상호 연계 및 융합을 촉진하여, 국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사회과학”이란 인간, 사회, 문화 및 제도 등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2. “과학기술”이란 자연현상 및 인공시스템에 관한 이론과 응용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3. “융합연구”란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연구자 또는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4. “융합인재”란 인문사회적 통찰과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겸비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 ①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은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선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학문 간 평등한 협력과 상호 존중을 전제로 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문사회과학·과학기술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융합연구 및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문사회과학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 제2장 융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5년마다 인문사회과학·과학기술 융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합연구 및 교육의 기본 방향
2. 연구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방안
3. 융합인재 양성 및 지원정책
4. 융합성과의 사회 확산 및 평가체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제7조(시행계획)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융합탐색위원회)

-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융합탐색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주요 정책 방향
  2. 예산 조정 및 평가 기준
  3. 융합연구 거점기관 지정 및 성과평가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④ 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융합연구 및 인재양성

##### 제9조(융합연구 거점기관의 지정)

- ① 국가는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중에서 융합연구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거점기관은 융합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센터, 융합데이터 플랫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융합인재 양성)

- ① 국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인문사회적 소양과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융합대학원, 융합학제, 공동학위과정 등의 설치를 장려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공공기관 및 산업계와 협력하여 융합인재의 실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현장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제11조(융합연구 지원사업)

- ① 국가는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공동연구에 대하여 예산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사업의 평가에는 사회적 영향, 윤리성, 포용성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제4장 지원 및 평가

제12조(재정지원 및 세제지원)

- ① 국가는 융합연구 및 융합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융합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성과평가 및 환류)

- ① 국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 3년마다 평가한다.
- ② 평가 결과는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국제협력)

국가는 인문사회과학·과학기술 융합과 관련된 국제공동연구, 인재교류, 국제포럼 개최 등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령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 인문사회과학분야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안

한국인문사회연구기획평가원을 설립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앞서 제시한 「학술진흥법」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기타 다른 관련 법령에도 전담기구와 관련한 조항신설을 고려할 수도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00조(한국인문사회연구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정책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예산 배분·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인문사회연구기획평가원(이하 “인문사회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문사회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문사회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문사회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사회과학분야 국가 연구개발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2. 인문사회과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3. 인문사회과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타당성 검토, 성과관리 및 평가
4.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특성에 적합한 정성·혼합평가 기준·지표 개발과 평가체계의 고도화
5. 인문사회과학 정책·연구 수요조사, 미래전망·예측 및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지원
6. 인문사회과학 데이터·지식 인프라 구축·연계 및 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7. 연구윤리, 연구자 권익보호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와 지원
  8. 지역혁신 및 생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R&D의 기획·확산 지원
  9.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획·평가·성과 확산 지원
  10. 그 밖에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인문사회기획평가원의 조직, 임원의 구성·임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VI. 결론

###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지원체계의 발전을 위해 현재의 연구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학술진흥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연구지원체계와 연구사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 성과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연구재단 통합 이후 예산과 조직의 차원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지원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과학기술계는 연구의 기획-집행-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형태인 반면 인문사회계의 경우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와 교육부의 기능이 혼재된 형태로 존재해 기능이 중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기획-집행(관리)-평가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측면에서 볼 때 인문사회계 연구 사업 비용은 과학기술계 연구사업의 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사업들의 진단 결과 역시 연구의 양적 성장,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 확장 등의 성과 등이 확인되었지만 과학기술계 중심의 평가체계, 성과지표 등으로 인해 연구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논문의 숫자에서 밀리는 인문사회계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지표 등으로 인해 인문사회계 연구의 진흥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 역시 학문 분야의 성격이 다른 두 분야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과학기술계에 비해 빈약한 인문사회계 지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물론, 연구지원사업들로 인한 긍정적 효과- 국제 논문의 증가, 각종 학술대회를 통한 해외 학자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계의 연구지원이 과학기술계보다 빈약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원기능 통합과 분리의 논의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연구재단이 성립된지 15년 이상이 지났고,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확대되었으므로 연구지원기능을 분리하더라도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점진적 개혁 방안과 중장기적 개혁방안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진흥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현행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 지원제도의 개선과 거버넌스 개편을 제안하였다. 이중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무엇보다도 중복성을 제거하는 것과 일부 대학에 대한 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현행의 양 중심의 성과평가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과학기술 분야와의 융합을 촉진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두 분야간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거버넌스의 개편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교육부의 학술진흥 담당 하부조직인 학술연구정책과를 국단위 학술연구정책관으로 승격하여 기초학술 진흥을 위한 정부조직 단위의 개선노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의 전체적인 틀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현행 한국연구재단 중심의 통합관리 한계 인정하고 기초학술진흥을 위한 한국학술진흥원(또는 재단)의 설립,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학문분야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융합탐색위원회의 설립, 인문사회분야 정책 기획,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할 한국인문사회과학기획평가원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 개편에 수반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새로운 조직의 설치와 연구지원체계의 보완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재정립과 이의 효과적인 작동만이 인문사회분야가 처한 위기와 미래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본 연구는 연구지원체계의 비교와 연구 성과의 진단을 통해 현재 연구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연구사업 성과 분석은 새로이 분석틀을 가지고 수행한 것은 아니고, 주로 기존의 문헌들을 종합하는 형태로 수행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엄밀한 수준의 성과분석은 아니며, 향후 좀 더 통합된 틀을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의 객관성을 보다 확실하기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설문조사 (서베이)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연구 방법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연구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 (연구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연구지원체계를 수행하는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외부 연구에서 담당자들이 본인들의 조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편의 필요성과 조직 구성안에 반영할 수 없었던 점은 한계로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정책대안의 적실성에 대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 개편의 대안으로 한국학술진흥원(가칭), 인문사회연구기획평가원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구의 기획과 집행, 그리고 성과관리까지 일관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론적인 정합성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예산을 고려해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여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 현실과 예산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관련 법안의 제·개정 의 용이성, 학술진흥원과 인문사회연구기획평가원의 조직 구성과 그에 따른 예산안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적인 정책 실행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연구재단이나 교육부가 직접 주체가 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부 연구자가 기관의 내부적인 상황까지 접근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자인 교육부와 연구재단이 직접 주도하는 연구에서 좀 더 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기천(2020). “목적 있는 기초 연구”: 한국과학재단 설립 이후 기초 연구 외연의 확장, 1977-1989. 한국과학사학회지, 42(1), 223-246.
- 강봉룡(2018). HK 사업의 성과와 과제-섬의 인문학: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문명사적 전환. 도서문화, 51, 221-258.
- 강성호. 한국 인문사회 학문진흥의 필요성과 진흥방향, 한국 인문사회 분야 기초생태계 활성화 방안, 2025. 국회 정책포럼 발표문.
- 고용수 외(2023).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체계화 방안 연구. 정책 연구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고장완·김면희·유불란·박지희(2023). 국내외 사회과학 집단연구 지원 비교연구 및 사회과학연구(SSK) 미래정책 방향.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 보고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1). 정책과 이슈 겨울호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도 연구역량강화사업 세부시행계획.
- 교육부 보도자료(2014.4.11). 한국의 ‘브루킹즈 연구소’를 꿈꾼다.
- 교육부(2020).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기본계획.
- 교육부(2021).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교육부고시 제 2021-24호.
- 교육부(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 계획.
- 교육부(2023.1.25). 2023년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한다!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 발표 -.
- 교육부(2023.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

획.

교육부(2023.4.).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

교육부(2023.4.18.).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글로벌대학.

교육부(2023.9.29.). 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원 편성.

교육부(20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권향원·김진선, 학술전담기구 설립 방안 연구, 수원, 아주대학교, 2021.

김명진·배관표(2023). 과학자 전문성 발달과정과 지원정책의 영향: BK21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7(2), 117-144.

김민희·최희용(202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용 쟁점 및 개선 방안 탐색: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33(4), 163-187.

김병주(2006). BK21 사업 재정지원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235-259.

김보라(2020). BK21플러스 사업참여가 대학원생 역량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 7-19.

김선연·김병주(2020).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대학 성과 및 교육여건 차이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9(3), 147-172.

나진희,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임금체계 일원화 분석: 연구재단과 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Focus 12월호, 2013. 12.

동아일보, “[사설]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은 실패했다” 동아일보, 2010. 09 .13.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2015). 인문한국(HK) 사업 소개. 연구소

홈페이지.

박관규(2024).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 구축과 추진을 위한 쟁점과 과제. 지방정부 정책&이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귀순, 김해도, 장경수(2017). 한국의 기초연구 40년, 합리적 진단과 발전과제.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581-1603.

박천오(2011).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보, 8(1), 1-30.

백원영·이상준·주휘정·정재호·안선민·박동·김형만(2024).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인재정책 전략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법제처(2008). 「한국연구재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 법제처. 사이언스타임즈 (2008)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통합 우려”

(2008.4.28.)<https://www.sciencetimes.co.kr/nscvrg/view/menu/255?searchCategory=226&nscvrgSn=58281>

서재영(2024). 제22대 국회의 고등교육 입법과제. 교육비평, 54, 46-77.

성지은, 송위진(2008). 정책 조정의 새로운 접근으로서 정책 통합: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1(3), 352-375.

손호철, 임수원, 김영민, 천세영 (2012).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연구재단 국가R&D 보고서

송위진(2012).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특성과 발전 방향. 기술혁신연구, 20(3), 129-151.

송충한, 조현대(2010). 창의적 기초연구성과를 위한 연구지원제도 개

- 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 신희영(2014).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경제와사회*, 103, 12-42.
- 윤석준·이경수·김현수·이수연(2023). 인문한국(HK)/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성과분석(2007-2022), HK/HK+성과확산총괄센터 정책연구 보고서.
- 이강재(2019). 학술진흥 정책 수립체계 재정립 및 중장기 학술진흥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2018-77.
- 이강재(2022). 2022년 고등교육현안토론회 발표자료. 비판사회학회
- 이삼열(2021). 우리나라 과학기술체제 이력분석. 서울: 한국행정학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탁연구보고서.
- 이정미·김훈호(2024). RISE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의 쟁점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33(4), 51-81.
- 이필남(2020). 정부 재정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9(4), 47-72.
- 인문한국연구소협의회·HK/HK+성과확산총괄센터(2023). 2023 인문한국플러스(HK/HK+) 지원사업 성과자료집.
- 장재혁, & 윤장혁(2017).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동향 분석.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326-2332.
- 정근하, & 노영희(2021). 인문사회과학분야 융합연구지원사업의 장기 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35(2), 275-295.
- 정세환, & 설성수(2010). 한국의 기초과학연구 발전의 시대구분과 발전요인 도출. *기술혁신학회지*, 13(3), 587-616.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 조성택(2015). 정부주도 인문학진흥의 가능성과 한계: 인문한국

- (Humanities Korea) 사업과 그 이후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실, 101-118.
- 주상현, 명성준, & 김서용(2021).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지원체계 구축 방향: 인문사회, 기초보호학문을 중심으로. 2021 학술정책포럼 인문사회분야 미래세대 학술진흥관련 제3차 세미나, 2021.09.29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및 국회 주관.
- 지방시대위원회(2023.9.14.).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 차성현(2024).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과제 탐색: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42(1), 185-210.
- 하봉운(2025).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라이즈(RISE)와 글로벌대학 30을 중심으로. *교육비평*, (58), 139-176.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2). 2012년 한국연구재단 PM 외부평가 실시방안 연구.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4).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 한국대학신문(2024.05.06). [연재기획 '라이즈 사업 기반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추진 계획'] ① 고등교육 국가재정지원 방식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라이즈(RISE)의 성공 포인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2651>
-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2021). 한국사회과학(Social Sciences Korea) 연구집단 성과분석 보고서. 대전: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2009). \*한국연구재단 출범과 기초연구사업 추진방향\*. 대전: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2010). 2009 대학산학협력백서. 대전: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2012). 한국연구재단 PM 제도 및 운영 현황. 대전: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2019). 비전 NRF 2030. 대전: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웹진(2024a). 4단계 BK21사업, 숫자 너머 질적 혁신을 선도한다. 한국연구재단 웹진 2024년 7월호.

한국연구재단 웹진(2024b). 연구실적 평가에 질적평가 100% 도입, 달라진 '4단계 BK21사업 혁신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한국연구재단 웹진 2024년 7월호.

한국연구재단 웹진(2024c). 연구의 질적 성장과 건강한 학술 생태계를 기대하며. 한국연구재단 웹진 2024년 7월호(김민수 교수 기고).

한국연구재단 웹진(2024d). 대학 연구업적 평가의 현황과 과제. 한국연구재단 웹진 2024년 7월호.

한국연구재단 웹진(2024e). '연구활동분석'은 계속 진화한다. 한국연구재단 웹진 2024년 6월호.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HK+)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hk.nrf.re.kr>

한국연구재단(2016). 2016-17 SSK 연구센터(단) 현황 분석. SSK 네트워크.

한국연구재단(2019). HK사업 총괄평가 편람.

한국연구재단(2020).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 논문성과 통합 분석. 성과분석보고서.

한국연구재단(2023).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성과분석보고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s://www.nrf.re.kr/page/378?menuNo=378&bizNo=237>

한국학술진흥재단(2009). 한국학술진흥재단 28년사. 서울: 한국학술

진흥재단.

허정(2021). 대학원 내 학생참여 및 학습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BK21 사업 고등교육정책 개입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홍길표(2009). 통합된 교과부 조직문화의 융합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경영연구원.

황준성, 이희현, 유경훈, 양희준, 김성기, 유기용, 오상아(2018).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황준연(2010). 국가R&D과제 평가 개선 방안. 정책연구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DiMaggio, P. J., & Powell, W. W.(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Hannan, M. T., & Freeman, J.(1984). Structural inertia and organization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49-164.

Salancik, G. R., & Pfeffer, J.(1978).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job attitudes and task 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24-253.

Sommer, E., & Gamper, M.(2021). Beyond structural determinism: advantages and challenges of qualitative social network analysis for studying social capital of migrants. *Global Networks*, 21(3), 608-625.